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2026, Vol. 40, No. 2, 179-217
https://doi.org/10.21193/kjspp.2026.40.2.004

정규논문

시장 및 경제적 체제 정당화 척도의 한국판 타당화 연구

송 찬 기 **문 찬 기†**

전북대학교 심리학과

체제 정당화는 불공정한 사회 체제에 대한 구성원들의 역설적인 지지를 설명하는 유용한 사회심리학적 개념이다. 본 연구는 서구 문화권에서 개발된 척도를 기반으로, 경제 체제의 절차적 측면에 대한 정당화(시장 체제 정당화)와 결과적 측면(경제적 체제 정당화)에 대한 정당화를 측정할 수 있는 두 척도의 한국판 타당화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1 (n = 788)과 연구 2 (n = 734)에서는 탐색적 및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각 척도의 요인 구조를 확인하였다. 연구 3 (n = 400)에서는 체제 정당화 척도 간의, 그리고 이론적 유관 개념(우익권위주의, 사회지배지향성, 보수주의)과의 연관성을 살핌으로써 타당도를 분석하였다. 그 과정에서 낮은 타당도를 보인 역채점 문항으로 구성된 요인들을 척도에서 제외하였다. 최종 선정된 요인들을 대상으로 성별, 연령,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측정 불변성을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두 요인의 시장 체제 정당화 척도와 단일 요인의 경제적 체제 정당화 척도를 제안한다. 본 연구는 경제 체제에 대한 정당화를 측정할 수 있는 두 가지 도구를 제시함으로써 향후 한국인의 경제관 및 체제 정당화 기제에 대한 실증적 연구의 토대를 마련한다.

주요어 : 체제 정당화, 시장 체제 정당화, 경제적 체제 정당화, 척도 타당화

†교신저자: 문찬기, 전북대학교 심리학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E-mail: chanki.moon@jbnu.ac.kr

ⓒ 2026, Korean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ical Association.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한강의 기적’이라 일컬을 만큼 한국 경제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압축적 성장을 이룩했다. 하지만 고도성장에 감춰졌던 경제 체제의 문제들이 오늘날 하나씩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과연 자원의 배분을 맡은 시장은 재화와 부를 어떻게 나누고 있는가? 시장 기제의 한계는 오늘날 수도권의 주거 문제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인구 과밀화와 투기적 가수요가 맞물리면서, 최근 서울의 주택 가격은 평범한 노동자가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3년을 모아야 하는 수준에 이르렀고(이인혁, 2024), 수도권 무주택자의 *평균적인*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20.2%)은 정부 기관이 부담스러운 수준이라고 판단하는 기준을 넘어섰다(국가데이터처, 2025). 이러한 상황에서 집이 절실한 청년층은 점차 불안정한 주거 환경에 내몰리고 있다(박강산, 2024; 이은정 등, 2024; 이하진, 전태영, 2025).

경제 체제의 결과 차원의 폐해 역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인식 모두에서 한국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은 악화하였다. 한 언론사에서 우리나라의 33개 불평등 지표의 최근 20년의 추이를 검토한 결과, 긍정적 추세를 보인 지표보다 부정적 추세를 보인 지표가 더 많았으며, 개선을 보인 지표마저 여전히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황경상 등, 2025). 이러한 현실 속에 한국 사회가 불평등하다는 인식 또한 증가하는 추세다(황선재, 2023). ‘어떤 수저를 물고 태어났는지’가 인생을 결정한다는 수저 계급론의 유행은 고착화된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인식을 방증한다(김수지, 2016). 문제는 불평등이 구성원들의 심리적 안녕감 또한 저해한다는 것이다(김영주, 나진경, 2018). 선행 연구에 따르면 경제적 불평등을 심각하게 인식하는 사람일수록 삶에 대한 만족과 행복감을 적게 느끼며, 미래를 긍정적으로 전망하지 못하는 경향을 보인다(남현동 등, 2024; 이용주, 장두석, 2025). 나아가 경제적 불평등은 높은 주거비와 더불어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미루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박진백, 2024; 정기용 등, 2022). 개인과 사회 수준에서, 한국의 경제 체제가 자신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경제 체제의 결함과 이로 인한 심리·사회적 악영향이 명백함에도 대다수의 한국인은 이를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다. 한 조사(Zitelmann, 2023)에 따르면 한국인은 시장 경제 체제에 대한 부정적 진술문보다 긍정적 진술문에 더 동의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조사 대상 34개 국가 중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었다. 다른 조사(임성호, 2024)에 따르면 한국인 10명 중 6명은 우리나라의 자본주의와 시장 경제 체제가 우리나라의 전반적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미래 번영에 좋은 시스템이라고 인식한다. 이에 반해 두 진술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은 10명 중 1명 수준이었다. 나아가 한국인은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에 점차 냉소적으로 변하고 있다. 한국종합사회조사(김지범, 2025)에 따르면 재분배 정책에 대한 찬성 비율은 2009년 74.9%에서 2021년 53.6%로 20% 넘게 감소하였다. 정부의 실업자 생활 지원에 동의하는 비율이나(81.2% → 40.5%) 저소득층 지원 유지에 동의하는 비율(78.3% → 31.3%) 역시 같은 기간 절반 넘게 감소하였다.

경제 체제의 명백한 결함에도 불구하고 사회 구성원들이 이를 오히려 지지하고 옹호하는 역설적인 현상을 사회심리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체제 정당화 이론(system justification theory; Jost, 2020; Jost & Banaji, 1994)에 따르면 이는 현재 사회적 체제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심리적 과정, 체제 정당화의 결과이다(Jost et al., 2004; Napier et al., 2006). 체제 정당화 이론은 인간에게 현재의 사회경제적 체제가 공정하고, 정당하며, 안정적이라고 지각하려는 기본적인 동기가 있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동기는 개인 자신이나 내집단을 옹호하려는 동기와 구분되기에, 사람들은 설령 자신이나 내집단이 체제의 피해자가 되더라도 적극적으로 체제를 지지하려 할 수 있다. 이때 사람들은 고정관념(Kay et

al., 2007)이나 사상적 신념 체계(예, 능력주의, McCoy & Major, 2007)를 구축하거나, 체제에 도전하는 사람과 거리를 두고 그 사람을 폄하하는 등의 방식(Kay et al., 2009; Yeung et al., 2013)으로 기존 체제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체제 정당화는 일종의 진통제처럼 작동하여 체제의 피해자들이 자신의 처지에 단기간이나마 만족할 수 있게 만든다(Jost & Hunyady, 2003; Napier et al., 2020).

다만, 체제 정당화 이론이 체제 정당화를 설명하는 유일한 이론적 관점은 아니다. 학계 일각에서는 체제 정당화가 기저의 독립적인 동기에 기인하는지, 아니면 사회 정체성 이론의 연장선에서 설명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Jost et al., 2019; Jost et al., 2023; Owuamalam et al., 2019; Rubin et al., 2023). 그러나 체제 정당화가 발생하는 심리적 근원에 관한 논의는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이 아니다. 본 연구는 사회 구성원들의 지닌 다양한 양상의 체제 정당화를 타당하게 측정하는 방법에 초점을 둔다.

체제 정당화 이론의 연구들은 사회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정당화(일반적 체제 정당화, Kay & Jost, 2003)를 넘어 특정 사회 구조에 한정되는 형태의 정당화에 대해서도 주목했다(예, 성별에 다른 위계, Jost & Kay, 2005; 정치 체제, Jost et al., 2010; Rutto et al., 2014). 특히 경제 체제에 관해서는 두 가지 형태의 체제 정당화가 제안되었다. 하나는 시장 체제 정당화(market system justification)로, 시장 경제 원리가 단지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공정하고, 정당하며, 정의롭다고 여기려는 심리적 기제이다(Jost, Blount, et al., 2003). 시장 체제 정당화는 전형적으로 시장 원리에 부합하는 경제 원칙이 공정하고 정당하다는 믿음, 그리고 시장 원리에 따른 결정이나 결과가 역시 공정하다고 여기는 경향으로 나타난다. 시장 원리는 오늘날 재화와 자원을 나누는 경제의 핵심 규칙이므로, 시장 체제 정당화는 경제 체제의 절차적 측면에 대한 정당화 기제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Blount, 2000). 이에 대응하는 경제적 체제 정당화(economic system justification; Jost & Thompson, 2000)는 부와 자원이 집단 간에 불평등하게 분배된 상황 자체에 대한 정당화 기제로, 경제 체제의 결과적 측면에 대한 정당화 기제에 가깝다. 경제적 체제 정당화는 흔히 경제 체제 하에서 모두가 공평하게 성공할 기회를 얻기에 불평등은 개인이 받아 마땅한 결과라는 신념에 투영된다(Goudarzi et al., 2020; Jost & Thompson, 2000). 경제적 불평등은 오늘날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유발하는 대표적인 사회문제이기에, 후속 연구들은 경제적 체제 정당화를 경제 체제 전반에 대한 정당화의 지표로 해석하기도 하였다(예, Feygina et al., 2009; Goudarzi et al., 2020; Hoffarth et al., 2019; Valtonen et al., 2026).

선행 연구들은 경제 체제에 관한 두 가지 형태의 정당화가 각각 미시적 경제 행동 및 사회정치적 사안에 대한 반응과 깊게 연관됨을 확인해 왔다. 먼저, 시장 체제 정당화는 개별 시장 참여자의 태도와 의사결정을 설명하는 변수로 주로 다뤄졌다. 예를 들어, 시장 체제 정당화가 강한 소비자는 서비스 접점 직원에 대한 기업의 통제적 정책에 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거나(Dao et al., 2025), 기업의 추문이나 비윤리성에 대해 덜 심각하게 반응하는 경향을 보인다(Jasinenko et al., 2020; Jost, Blount, et al., 2003). 시장 체제 정당화는 비단 소비자의 행동뿐만 아니라 기업 의사결정자의 사업 전략 선택과도 관련된다(예, 사회적 책임 활동; Hafenbradl & Waeger, 2016). 이처럼 시장 체제 정당화가 시장 참여자의 행동을 설명하는 유용한 사상적 변수라고 확인됨에 따라, 일부 연구는 이를 소비 영역에서의 정치적 지향에 따른 행동 차이를 설명하는 주요 기제로 채택하기도 하였다(Davidson, 2025; Jasinenko et al., 2020; Lenk et al., 2025).

반면, 경제적 체제 정당화는 사회 · 경제 · 정치적 문제에 대한 보수적 태도를 예측하는 변수로 다뤄졌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경제적 체제

정당화가 강한 사람일수록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려는 정책적 시도에 반대하고(Goudarzi et al., 2020; Rodriguez-Bailon et al., 2017), COVID-19 위기에서도 개방형 경제 정책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Jain et al., 2023). 또한 이들은 기후 변화(Feygina et al., 2009), 동물 복지(Hoffarth et al., 2019), 페미니즘 및 흑인 인권 운동(Jost, 2020)과 같은 진보적 의제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으며, 보수 정당 후보에 투표하는 경향을 보였다(Azevedo et al., 2017). 비교적 최근의 연구는 경제적 체제 정당화가 경제적으로 소외된 집단(예, 정신질환자)에 대한 낙인을 강화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Valtonen et al., 2026).

사회정치적 태도에서부터 일상의 소비 행동에 이르기까지, 경제 체제에 대한 두 가지 형태의 정당화는 넓은 범위의 개인행동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변수이다. 그러나 그 이론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내 체제 정당화 연구에서 한국인의 경제 체제에 대한 정당화 기제는 매우 드물게 다뤄졌다. 선행 연구들은 주로 일반적 수준에서 체제 정당화의 기제나 그 결과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강민재, 최훈석, 2025; 김현정, 박상희, 2015; 안혜정, 2019; 안혜정 등, 2017; 오하석, 한성민, 2022). 소수의 연구가 특수한 형태의 체제 정당화에 주목했지만, 이들은 주로 학벌주의와 같이 한국 사회의 독특한 사회 제도에 관심을 두었다(송찬기, 2023; 안혜정, 2019). 체제 정당화 이론을 바탕으로 한국인의 재분배 정책에 대한 태도를 설명한 연구에서도 경제 체제에 대한 정당화를 체제 정당화 사상적 신념(능력주의)을 통해 간접적으로 포착하는 데 그쳤다(김태심, 2020).

한국인의 경제 체제에 대한 정당화를 다룬 연구가 미진한 이유 중 하나는 이를 측정할 수 있는 타당한 도구가 제안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장 체제 정당화와 경제적 체제 정당화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측정 도구로는 서구에서 개발된 Jost, Blount 등(2003)의 시장 체제 정당화 척도와 Jost & Thompson (2000)의 경제적 체제 정당화 척도를 들 수 있는데, 해당 두 척도가 한국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지 심리측정학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확인되지 않는다. 소수의 국내 연구가 두 척도를 활용한 바 있지만, 이들은 척도의 심리측정학적 속성을 제한적으로만 확인하였다. 예를 들어, 이한준과 박종철(2008)은 시장 체제 정당화 척도 중 한국 맥락에 적합하다고 판단된 여섯 문항을 임의로 선별하여 측정에 사용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신뢰도 저하 등의 문제로 일부 문항을 추가로 제거해야 했다. 한편, 서한별과 손준종(2022)은 경제적 체제 정당화 척도 전체를 번역한 뒤 사용하였으나, 요인 구조에 대한 탐색 과정을 생략한 채 주성분 분석을 통해 단일 차원성만을 확인하는 데 그쳤다. 이상의 접근은 척도의 타당도를 검증하기에는 제한적이며, 해당 척도가 한국인의 체제 정당화를 적절히 측정할 수 있는지, 나아가 후속 연구에도 안정적으로 적용 가능한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닌다(Agadullina et al., 2021). 오히려 해당 연구들의 제한적인 분석 과정에서도 일부 문항이 낮은 신뢰도 또는 낮은 부하량을 보여 분석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실은, 다른 문화권에서 개발된 체제 정당화 척도를 단순히 번역하여 사용하는 것이 심리측정학적으로 부적절함을 방증한다.

경제 체제에 대한 정당화를 측정하는 도구의 심리측정학적 검증은 특히 두 가지 측면에서 필요하다. 첫째, 서구의 척도를 번역한 문항들이 한국인의 체제 정당화 기제를 온전히 포착하지 못할 수 있다. 국가마다 경제 체제의 세부 양상이 다르기에, 문항의 내용이 보편적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Agadullina 등(2021)은 기존 체제 정당화 척도들이 서구와는 다른 사회·경제·정치 체제를 채택한 러시아에서는 적절한 타당도를 보이지 않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러시아의 체제적 특수성을 반영하여 척도를 재구성한 바 있다. 나아가 사회 구성원이 체제를 정당화하는 방식에서도 문화에 따른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특히, 한국인

은 체제의 결함에 완전히 눈을 감기보다 이를 인정하면서도 체제를 정당화하는 경향을 보인다(안혜정 등, 2017).

둘째, 두 척도가 한국인에게 적용되었을 때 원 척도와는 다른 요인 구조를 지닐 가능성이 존재한다. 실제로 선행 연구들은 경제적 체제 정당화 척도의 요인 구조가 응답자의 문화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고해 왔다. 예를 들어, 해당 척도는 이탈리아인에게는 단일 요인 구조를 보이지만(Caricati, 2008), 영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3요인 구조를 보인다(Becker & Sparks, 2016). 시장 체제 정당화 척도와 경제적 체제 정당화 척도가 주로 전체 문항 점수를 기반으로 분석에 활용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 맥락에서 해당 척도들이 단일 차원을 띠는지, 혹은 최소한 서로 높은 상관을 보이는 복수의 요인으로 구성되는지 확인하는 것은 척도를 활용할 후속 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한국인의 경제 체제에 대한 정당화를 신뢰롭고 타당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기존 척도를 단순히 번역하는 것을 넘어 한국인에게 적합한 문항을 선별하고 요인 구조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두 척도의 심리측정학적 속성을 체계적으로 검증하여, 한국인의 경제 체제에 대한 정당화를 측정하는 도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연구 1과 연구 2에서는 각각 한국어로 번역된 Jost, Blount 등(2003)의 시장 체제 정당화 척도와 Jost & Thompson (2000)의 경제적 체제 정당화 척도에 대해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척도의 요인 구조를 확인한다. 연구 3에서는 체제 정당화 척도 간 및 유관 변수들과의 관련성을 확인하여 척도의 타당도를 추가로 분석하며, 두 척도가 성별, 연령, 그리고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해 갖는 측정 불변성을 갖는지 확인한다. 본 연구는 서구에서 개발된 척도를, 한국인을 대상으로 타당화 함으로써 문화적 배경을 고려한 체제 정당화 측정 도구를 제안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제안되는 두 척도는 한국인의 사회 · 경제 · 정치적 태도를 실증적으로 탐구하고 이에 관한 정책적 함의의 도출하려는 후속 연구들에 유용한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자료와 스크립트는 Open Science Framework의 온라인 저장소(https://osf.io/b3h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구 1. 시장 체제 정당화 척도의 요인 구조 탐색 및 확인

방 법

참가자 및 연구 개요

조사 전문 기관 인바이트를 통해 모집된 788명의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성인 한국인이 온라인으로 조사에 참여하였다(여성 428명, 평균 연령 26.9세, 성별과 연령 무응답 2명). 참가자들에게서 수집된 자료는 무작위로 구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n = 384, 여성 206명, 평균 연령 27.1세)과 확인적 요인분석(n = 384, 여성 222명 평균 연령 26.7세, 성별과 연령 무응답 2명)에 활용되었다. 참가자들은 한국어로 번역된 시장 체제 정당화 25문항(표 1)에 7점 척도(1 = 전혀 동의하지 않음 또는 공정하지 않음, 7 = 매우 동의함 또는 공정함)를 사용하여 응답하였다.

측정 도구

Jost, Blount 등(2003)의 시장 체제 정당화 원척도는 전체 25문항으로, 시장 경제 체제를 절차적 측면에서 얼마나 공정하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15문항과 시장 원리에 따른 결정이나 결과를 공정하다고 인식하는 정도를 묻는 10문항으로 구성된다. 시장의 절차적 측면의 공정성을 묻는 문항은 제시된 진술에 동의하는 정도를 표시

하는 형식인 데 반해(예, “The free market system is a fair system” {Completely disagree/Completely agree}), 시장 원리에 따른 결과의 공정성에 관한 문항들은 진술에 제시된 상황에 관한 생각을 묻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예, “The fact that scarce goods tend to cost more in a free market system is⋯” {Unfair/Fair}).

원 시장 체제 정당화 척도의 번역-역 번역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저자들이 전체 25문항을 한국어로 번역하였다(표 1). 이때, 미국의 지역 간 주거비 차이(23번)와 노동자 가족(working family) 간 가사 도우미 고용 여력 차이(25번)에 대한 인식을 묻는 두 문항의 경우 어휘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해 한국인에게 문항의 의미가 명확히 전달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원 문항의 측정 의도를 유지하면서도 한국의 문화 및 시장 맥락에 부합하도록, 해당 문항들을 각각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가격 차이, 그리고 신혼부부 간 주거비 부담 여력 차이에 대한 인식을 묻는 문항으로 수정하였다.

이어서, 번역의 적절성을 검증하기 위해 한국어로 번역된 문항을 다시 영어로 역 번역한 뒤, 원 문항과의 의미적 유사성을 확인하였다. 문항의 역 번역에는 대규모 언어 모델(large language model)인 Gemini 3 (Google, 2025)가 사용되었다. 최근 대규모 언어 모델의 기계 번역 성능이 인간의 번역에 상응하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보고되면서(Jiao et al., 2023; Lihua, 2022), 심리 척도를 포함한 텍스트 자료의 문화 간 번역에도 대규모 언어 모델이 활용되고 있다(Chung & Kim, 2025; Lu et al., 2025). 역 번역 문항을 추출하기 위해 Gemini 3의 API에 다음의 프롬프트와 함께 번역된 시장 체제 정당화 척도의 25문항을 입력하였다: “Please translate the following sentence into English, using common American expressions for easy understanding and maintaining the original sentence structure as much as possible. Show only the translated sentence.” (Chung & Kim, 2025, p. 61325).

추출된 역 번역 문항과 원 문항 사이의 의미적 유사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문장 임베딩 기반 코사인 유사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코사인 유사도란 두 문장 임베딩 벡터 간의 각도를 바탕으로 계산한 유사도 지표로, 0에서 1 사이의 값을 지니며 두 임베딩 벡터가 유사할수록 높은 값을 갖는다. 원 문항과 역 번역 문항의 임베딩에는 Sentence-BERT (Reimers & Gurevych, 2019) 기반의 모델 중 가장 우수한 성능을 지닌 all-mpnet-base-v2이 사용되었다. 분석 결과, 25개의 원 문항-역 번역 문항 쌍의 코사인 유사도는 평균 .842 (범위: .644–.975)로 나타났다(부록 I). 다만, 코사인 유사도가 어느 정도 이상일 때 두 문장이 의미상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나 경험칙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의미적 텍스트 유사도 벤치마크(semantic textual similarity benchmark, Cer et al., 2017)의 검증 세트를 활용하여 경험적 임계치를 설정하였다. 해당 자료는 자연어 처리 모델에 기반한 문장 간 유사도 판단 결과가 인간의 판단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평가하기 위해 구축된 것으로, 다양한 문장 쌍(예, “The bird is bathing in the sink” - “Birdie is washing itself in the water basin.”) 및 복수의 인간 평정자가 그 의미적 유사성을 0점(전혀 다름)에서 5점(완전히 동일함) 사이로 평정한 점수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는 해당 검증 세트에서 ‘의미상으로 거의 동등하며 사소한 측면에서만 차이를 보이는 수준’(4점) 이상으로 평가된 문항 쌍들(n = 264)이 보이는 코사인 유사도의 분포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와 동일한 모델(all-mpnet-base-v2)을 적용하였을 때, 이들은 평균 .871, 표준편차 .089 (5–95백분위수: .705–.979)의 코사인 유사도를 보였다. 이를 바탕으로 동일한 모델을 사용하는 경우 의미상으로 거의 유사한 문항 쌍에서 .705까지의 유사도는 통계적으로 충분히 관찰될 수 있는 수준이라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해당 수치를 의미적 유사성의 판단 준거로 설정하였다. 시장 체제 정당화 원 문항-역 번역 문항 쌍

표 1. 시장 체제 정당화 척도 문항

번호	문항
1	**시장 경제 체제는 공정한 체제이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동의한다]**
2	**일반적인 비즈니스 활동은 공정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기업은 생존할 수 없기 때문이다.**
3	**많은 경우 진짜 "공정한" 시장 가격은 존재하지 않는다.***
4	윤리적인 사업은 비윤리적인 사업보다 이익을 내지 못한다.*
5	**모두가 독립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좇을 수 있는 시장 체제야 말로 가장 공정한 경제 시스템이다.**
6	**시장의 압력을 따라 사업을 벌이는 건 항상 공정하지만은 않다.***
7	**시장 경제 시스템은 효율적이다.**
8	시장 시스템은 공정과는 거리가 멀다.*
9	시장의 압력을 따라 사업을 벌이는 건 윤리적이다.
10	**시장 경제 시스템 아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받아 마땅한 몫을 얻는 경향이 있다.**
11	**가장 공정한 결과는 구매자가 "공정한" 시장 가격을 지불하는 거래에서 나타난다.**
12	이익을 많이 남기는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도덕적 책임감을 더 많이 갖는 경향이 있다.
13	규제를 따르는 거래가 공정한 거래다.*
14	**경제적 시장은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보상하지 않는다.***
15	얼마가 되었든,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동의한 가격은 공정한 가격이다.
16	기업이 '소비자가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는 시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품의 가격을 올리려 한다면, 이는… [공정하지 않다/공정하다]
17	**운동선수 A가 속한 팀의 멤버들의 연봉은 오르지 않았지만, A의 연봉만 다른 팀의 비슷한 수준의 선수에 맞춰 상승했다면, 이는…**
18	**자유 시장 경제 시스템 아래에서 희소성이 높은 제품이 더 비싼 것은…**
19	**어떤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정리해고를 하려 한다면, 이는…**
20	**소비자가 음료를 살 곳이 마땅치 않다는 걸 알고, 공항이나 공연장에서 음료에 더 높은 가격을 붙여 판매하는 것은…**
21	**같은 돈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가난한 사람보다, 부자인 사람이 더 큰 집에서 더 좋은 이웃과 함께 사는 것은…**
22	**어떤 기업이 더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 자국의 고임금 노동자를 외국인 저임금 노동자로 대체하려 한다면, 이는…**
23	**비슷한 집이 지방에 비해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더 비싼 것은…**
24	**교육 수준이 높은 근로자가 교육 수준이 낮은 근로자에 비해 더 높은 임금을 받는 것은…**
25	**일부 신혼부부가 다른 신혼부부에 비해 더 넓은 집에 살 수 있는 것은…**

주. 별표(*)는 역채점 문항.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선별된 문항은 굵게 표시.

중 이보다 낮은 코사인 유사도를 보인 문항 쌍은 23번(.661)과 25번(.644)이었는데, 모두 앞서 한국 실정에 맞게 소재를 조정한 문항들이었다. 이상의 검토를 거쳐 역 번역된 문항이 원 문항의 의미를 적절히 유지하고 있으며, 따라서 모든 문항이 적절하게 번역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분석

분석에는 R 4.5.1 (R Core Team, 2025)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데이터 전처리 및 핸들링에 tidyverse (Wickham et al., 2019), 탐색적 요인분석에 psych (Revelle, 2025), 확인적 요인분석에는 lavaan (Rosseel, 2012) 및 semTools (Jorgensen et al., 2025) 패키지가 활용되었다. 모든 통계 분석에 앞서 해당하는 문항을 역채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강한 체제 정당화를 반영하도록 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은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되었다. (1) 먼저, 개별 문항 점수의 기술 통계량 및 문항 점수 간 상관을 확인하였다. 이때 어떤 문항과도 .3 이상의 상관을 보이지 않는 문항은 다른 문항과 공통된 내용을 측정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척도에서 제외하였다. (2) Kaiser-Meyer-Olkin (KMO) 측정치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를 통해 요인분석 적절성을 확인하였다. (3) 문항 간 피어슨 상관행렬에 대한 평행분석을 실시하여 적정 요인 수를 결정하였다. (4) 평행 분석에서 제안된 요인 수를 바탕으로 최대우도법을 사용해 요인을 추출하였으며 사각회전(오블리민)을 통해 최종 요인 구조를 결정하였다. 최종 요인 구조에서 공통분이 .2 이하이거나 복수의 요인에 .3 이상의 부하량을 갖는 문항은 척도에서 제외하였다. 문항을 제외한 경우 (2)부터 분석을 다시 진행하였다. 문항의 삭제는 한 번에 하나씩 순차적으로, 안정된 요인 구조가 관찰될 때까지 진행되었다. 비록 안정된 요인 구조가 확인되더라도 해석이 어려운 경우 요인 수를 축소한 뒤 요인 추출을 다시 진행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확인된 요인 구조를 확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모수의 추정에는 강건한 표준오차 및 Satorra-Bentler 척도화 검정 통계량을 사용하는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with robust standard errors and a Satorra-Bentler scaled test statistic; MLM)이 사용되었다. 요인 구조의 적합도 판단에는 comparative fit index (CFI; > .90; 홍세희, 2000),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MSEA; < .08; McDonald & Ho, 2002), 그리고 standardized root mean square (SRMR; < .09; Hu & Bentler, 1999)를 사용하였다. 개별 모형의 적합도 판단과 더불어 대안 모형과의 비교를 통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확인된 요인 구조가 가장 나은 적합도를 보이는지 확인하였다.

요인 구조를 확증한 후에는 척도를 구성하는 요인의 수렴 및 변별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요인의 수렴 타당도는 문항의 요인 부하량(> .5), 평균 분산 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 .5), 개념 신뢰도(McDonald's ω > .7)를 종합하여 판단하였다(Hair et al., 2013). 요인 간 변별 타당도의 판단에는 heterotrait-monotrait ratio (HTMT; < .85)를 활용하였다(Henseler et al., 2015; Roemer et al., 2021).

결 과

시장 체제 정당화 척도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전체 25개 문항 점수는 평균 3.716–5.393, 표준편차 1.102–1.567, 왜도 -0.767–0.236, 그리고 첨도 -0.837–0.548의 분포를 보였다. 모든 문항 점수의 왜도와 첨도는 정규성을 가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었다(왜도 < 2, 첨도 < 7; 서원진 등, 2018). 어떤 문항과도 .3 이상의 상관을 보이지 않는 15번 문항을 척도에서 제외한 뒤 탐색적 요인분석을 진행하였다.

표 2. 시장 체제 정당화 척도의 기술 통계량 및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연구 1, n = 394)

문항	*M*	*SD*	왜도	첨도	형태 계수(구조 계수) 요인 1: 시장 원리에 따른 결과의 공정성	요인 2: 시장의 절차적 측면의 공정성	요인 3: 시장의 절차적 측면의 불공정성	공통분
23	4.515	1.567	-0.418	-0.433	.748 (.700)	-.107 (.240)	.007 (.039)	.498
21	4.812	1.298	-0.430	0.106	.665 (.704)	.091 (.390)	-.060 (-.006)	.504
25	4.797	1.268	-0.251	-0.074	.573 (.613)	.087 (.352)	-.001 (.047)	.382
24	4.858	1.486	-0.642	-0.067	.570 (.578)	.027 (.280)	-.068 (-.029)	.339
18	5.393	1.183	-0.767	0.548	.566 (.532)	-.056 (.188)	-.123 (-.096)	.302
22	4.145	1.420	-0.293	-0.280	.563 (.615)	.091 (.375)	.176 (.223)	.419
17	4.383	1.351	-0.272	-0.065	.528 (.537)	.031 (.261)	-.096 (-.059)	.297
20	3.716	1.557	-0.044	-0.758	.489 (.523)	.052 (.301)	.168 (.206)	.306
19	4.061	1.382	-0.005	-0.416	.459 (.522)	.118 (.349)	.133 (.178)	.304
10	4.381	1.257	-0.259	-0.174	-.050 (.264)	.686 (.658)	-.028 (.065)	.436
2	4.089	1.391	0.034	-0.593	-.087 (.203)	.628 (.588)	-.001 (.081)	.351
1	4.513	1.324	-0.477	0.065	.118 (.397)	.594 (.658)	.063 (.153)	.448
11	4.741	1.174	-0.374	0.343	.056 (.283)	.507 (.517)	-.114 (-.040)	.283
7	4.799	1.102	-0.134	0.217	.184 (.412)	.492 (.578)	.004 (.084)	.361
5	4.079	1.418	0.006	-0.483	.100 (.317)	.461 (.517)	.074 (.145)	.281
3	3.744	1.549	0.107	-0.800	-.070 (-.022)	.000 (.075)	.765 (.761)	.583
6	3.774	1.411	0.191	-0.576	.066 (.081)	-.070 (.067)	.763 (.758)	.579
14	3.914	1.326	0.236	-0.365	-.023 (.089)	.169 (.236)	.558 (.580)	.361
	설명 분산				17.2% (21.5%)	11.2% (16.9%)	9.0% (9.4%)	
	고유값				3.101	2.021	1.611	
	Cronbach's α				.828	.757	.740	
	McDonald's ω				.829	.759	.746	

주. KMO = .850, Bartlett 구형성 검정 $\chi^2(153) = 2000.334$, $p < .001$. 형태계수가 .3 이상인 경우 굵게 표시. 전체 문항 신뢰도: Cronbach's α = .830, McDonald's ω = .868.

탐색적 요인분석 과정에서 낮은 공통분을 보인 6문항이 추가로 척도에서 제외되었으며, 최종적으로 18문항 삼 요인 구조가 확인되었다(표 2). 세 요인은 Jost, Blount 등(2003)의 제안과 유사하게 구분되었다. 첫 번째 요인은 시장 원리에 따른 결정이나 결과를 얼마나 공정하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문항들로 구성되었으며, 이에 첫 번째 요인을 '시장에 따른 결과의 공정성'으로

명명하였다. 한편, 시장의 절차적 측면의 공정성 인식을 묻는다고 제안한 문항들은 채점 방식에 따라 두 번째 요인(긍정 문항)과 세 번째 요인(부정 문항)으로 구분되었다. 이에 따라 두 번째 및 세 번째 요인을 각각 '시장의 절차적 측면의 공정성', 그리고 '시장의 절차적 측면의 불공정성'으로 명명하였다. 시장 원리에 따른 결과의 공정성 요인과 시장의 절차적 측면의 공정성 요인은 서로 .461의 상관을 보였다. 반면, 시장의 절차적 측면의 불공정성 요인은 앞의 두 요인과 각각 .062와 .140의 낮은 상관을 보였다.

시장 체제 정당화 척도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된 삼 요인 구조와 더불어 세 가지 대안 모형을 비교 분석하였다: (1) 모든 문항을 단일 요인으로 구성한 모형, (2) 측정 내용을 고려하여 시장의 절차적 측면에 관한 두 요인을 통합한 이 요인 모형, (3)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관찰된 요인 간 상관을 고려하여 시장 원리에 따른 결과의 공정성 요인과 시장의 절차적 측면의 공정성 요인을 통합한 이 요인 모형. 이때, 대안 모형 1과 2에서는 역채점 문항인 3번, 6번, 그리고 14번 문항 사이의 잔차 상관을 허용하였다. 이는 공통 요인이 아닌 문항 형식의 유사성에 기인할 수 있는 문항 간 상관을 모형에 반영함으로써, 모형 추정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각 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 결과, 삼 요인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대안 모형의 적합도 지수보다 우수하였다. 대안 모형 2는 삼 요인 모형과 비슷한 수준의 적합도 지수를 보였다. 그러나, 대안 모형 2에서 역채점 문항들의 요인 부하량이 .067–.177로 매우 낮았던 반면, 해당 문항 사이의 상관계수는 .503–.544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역채점 문항 사이에 잠재 변수로는 설명되지 않는 상당한 크기의 공분산이 존재하며, 따라서 이들을 별도의 요인으로 구성하는 것이 타당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통계적 적합도와 이론적 해석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삼 요인 모형이 한국판 시장 체제 정당화 척도의 요인 구조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그림 1).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와 비슷하게, 삼 요인 모형에서 시장 원리에 따른 결과의 공정성 요인과 시장의 절차적 측면의 공정성 요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높은 수준의 정적 상관을 보였다(r = .569, p < .001). 반면, 시장의 절차적 측면의 불공정성 요인은 다른 두 요인과 낮거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상관을 보였다(시장 원리에 따른 결과의 공정성 요인 r = .181, p = .014; 시장의 절차적 측면의 공정성 요인 r = .150, p = .061).

시장 체제 정당화 척도의 요인별 신뢰도, AVE, 요인 간 상관, 그리고 HTMT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비록 세 요인 중 두 요인에서 AVE가 .5 미만으로 나타났지만, 두 문항을 제외한 모든 문항의 요인 부하량이 .5 이상이었으며 모

표 3. 시장 체제 정당화 척도의 확인적 요인분석 적합도 (연구 1, n = 394)

모형	χ^2	df	p	AIC	BIC	CFI	RMSEA [90% CI]	SRMR
3요인 모형	232.554	132	<.001	22983.224	23138.301	.925	.051 [.040, .061]	.055
대안 모형 1: 단일 요인 모형	387.566	132	<.001	23187.861	23342.938	.811	.081 [.071, 0.90]	.073
대안 모형 2: 이 요인 모형 (측정 내용 구분)	232.524	131	<.001	22984.506	23143.560	.925	.051 [.041, .062]	.056
대안 모형 3: 이 요인 모형 (상관 기반 구분)	388.611	134	<.001	23184.554	23331.679	.812	.080 [.071, .089]	.0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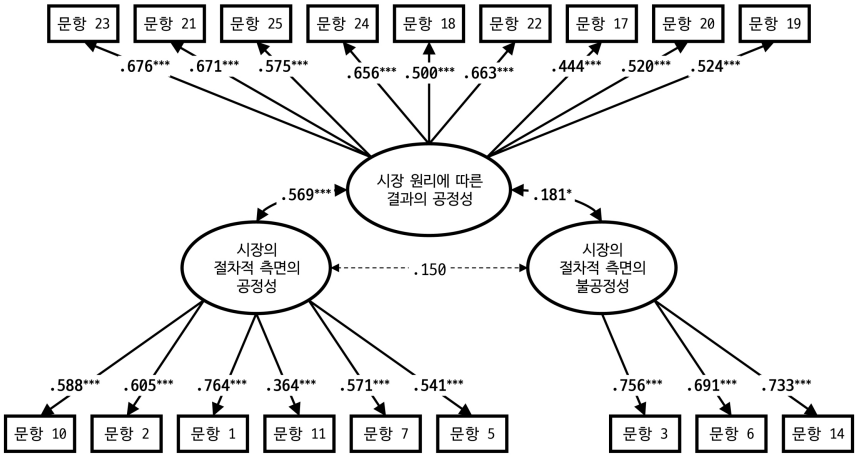


그림 1. 시장 체제 정당화 척도의 최종 모형 및 표준화 계수(연구 1, n = 394).

* p < .05, *** p < .001

표 4. 시장 체제 정당화 척도의 신뢰도, AVE, 요인 간 상관, 그리고 HTMT (연구 1, n = 394)

요인	*M*	*SD*	α	ω	AVE	1	2	3
1. 시장 원리에 따른 결과의 공정성	4.513	0.901	.820	.824	.350		.595	.172
2. 시장의 절차적 측면의 공정성	4.387	0.856	.743	.752	.348	.569***		.115
3. 시장의 절차적 측면의 불공정성	3.748	1.224	.770	.772	.531	.181*	.150	

주. 상관행렬에서 대각선 아래는 요인 간 상관을, 그리고 대각선 위는 HTMT를 의미. 전체 문항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 .826, McDonald's ω = .864.

* p < .05, *** p < .001

든 요인의 McDonald's ω가 .7 이상이었기에 수렴 타당도가 확보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요인 간 HTMT가 모두 기준치인 .85보다 낮게 나타났으므로, 요인 간 변별 타당도가 충족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논 의

연구 1에서는 서로 독립된 두 표본을 활용하여 시장 체제 정당화 척도의 18문항 삼 요인 구조를 확인하였으며, 척도가 요인 내 수렴 타당도 및 요인 간 변별 타당도를 지님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연구 1은 척도 내적 구조의 분석에만 초점을 두었기에 척도의 타당도를 제한적으로만 입증한다는 한계를 갖는다. 나아가 시장의 절차적 측면의 불공정성 요인이 척도 내의 다른 두 요인과 낮은 상관을 보였기에 해당 요인이 시장 체제 정당화 척도에 포함되는 것이 적절한지 판단이 필요하다. 이에 연구 3에서는 시장 체제 정당화 척도와 다른 체제 정당화 척도 및 유관 변수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였으며, 이를 통해 척도의 타당도에 대한 증거를 추가로 수집하고자 하였다. 이에 앞서, 연구 2를 통해 경제적 체제 정당화를 측정하는 도구를 타당화하였다.

연구 2. 경제적 체제 정당화 척도의 요인 구조 탐색 및 확인

방 법

참가자 및 연구 개요

연구 2에서는 서로 독립된 두 표본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다. 첫 번째 표본은 조사 전문 기관 마크로밀엠브레인을 통해 모집된 경력 5년 이상의 성인 직장인 334명(여성 87명, 평균 연령 46.8세)이었다. 이들은 한국어로 번역된 Jost & Thompson (2000)의 경제적 체제 정당화 척도 17문항(표 5)에 7점 척도(1 = 전혀 동의하지 않음, 7 = 매우 동의함)를 사용하여 응답하였다. 첫 번째 표본의 자료는 경제적 체제 정당화 척도의 탐색적 요인분석에 사용되었다. 두 번째 표본은 조사 전문 기관 인바이트를 통해 모집된 만 20세 이상 35세 이하의 구직자 400명(여성 184명, 평균 연령 27.5세)이었다. 이들은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선별된 7문항에 대해서만 응답하였다. 두 번째 표본의 자료는 확인적 요인분석에 사용되었다.

측정 도구

경제적 체제 정당화 척도의 번역-역 번역 과정은 연구 1과 동일하였다. 경제적 체제 정당화 척도의 원 문항과 역 번역 문항 사이의 코사인 유사도는 평균 .873, 표준편차 .084 (범위: .680

표 5. 번역된 경제적 체제 정당화 척도 문항

번호	문항
1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2	경제적 차이가 만연하기는 하지만, 그 차이는 필연적인 게 아니다. *
3	**사회에 존재하는 부의 차이는 자연 법칙에 의한 것이다.**
4	**우리 경제 시스템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할 만한 여러 이유가 있다. ***
5	가난을 없애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6	가난한 사람은 부자인 사람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
7	**우리 사회에서 성공하지 못한 걸 시스템의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 오직 스스로에게 책임이 있을 뿐이다.**
8	우리 사회에서 자원의 평등한 분배는 가능하다. *
9	**사회적 계급의 차이는 자연의 질서에 따른 것이다.**
10	**경제적 불평등은 정당하지 않은 자원 분배 때문에 발생한다. ***
11	모든 사람에게 충분한 일자리가 제공될 수 없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은 항상 존재할 것이다.
12	**경제적 지위는 사람의 성취에 대한 정당한 지표다.**
13	사람들이 원하기만 한다면, 경제 시스템을 평등하게 바꿀 수 있다. *
14	부의 평등한 분배는 자연스럽지 않다.
15	**극단적인 부와 극단적인 가난을 동시에 낳는 경제 시스템은 공정하지 않다. ***
16	소득을 더 평등하게 하려 해봐야 소용없다.
17	부자인 사람과 가난한 사람은 선천적으로 다르지 않으며, 오직 그들이 태어난 환경이 다를 뿐이다. *

주. 별표(*)는 역채점 문항.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선별된 문항은 굵게 표시.

−.976)로 나타났다(부록 II). 연구 1과 동일한 기준(.705)을 적용했을 때 13번(.680) 문항이 기준치 미만의 유사도를 보였다. 연구자의 질적 검토 결과 낮은 유사도가 원 문항-역 번역 문항 간 의미 차이보다는 사용된 어휘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판단되었다. 이에 따라 역 번역된 문항이 원 문항의 의미를 적절히 유지하고 있으며, 따라서 모든 문항이 적절하게 번역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결 과

경제적 체제 정당화 척도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전체 17개 문항의 점수는 평균 2.743−5.171, 표준편차 1.180−1.616의 분포를 보였다. 모든 문항의 왜도(-0.849−0.528)와 첨도(-0.932−0.497)는 정규성을 가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었다(서원진 등, 2018). 그러나 5번 문항과 11번 문항이 다른 어떤 문항과도 .3 이상의 상관을 보이지 않아 척도에서 제외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과정에서 낮은 공통분을 보인 4문항, 해석이 어려운 요인을 구성한 2문항, 그리고 교차 부하를 보인 2문항을 추가로 삭제하였다. 이상을 거쳐 최종적으로 경제적 체제 정당화 척도의 7문항 이 요인 구조를 확인하였다(표 6). 첫 번째 요인은 경제적 불평등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신념에 동조하는 정도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에 첫 번째 요인을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정당화'로 명명하였다. 반면, 두 번째 요인은 경제적 불평등이 불공정하고 부당하다고 인식하는 정도를 묻는 역채점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에 두 번째 요인을 '경제적 불평등의 불공정성'으로 명명하였다. 두 요인은 서로 .310의 상관을 보였다.

표 6. 경제적 체제 정당화 척도 문항의 기술 통계량 및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연구 2, n = 334)

문항	*M*	*SD*	왜도	첨도	형태 계수(구조 계수) 요인 1: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정당화	요인 2: 경제적 불평등의 불공정성	공통분
9	3.509	1.502	0.020	-0.850	.835 (.826)	-.028 (.231)	.683
3	3.653	1.616	0.055	-0.930	.731 (.733)	.007 (.233)	.538
12	4.470	1.346	-0.312	-0.380	.460 (.477)	.053(.195)	.230
7	3.796	1.564	0.000	-0.932	.392 (.459)	.216 (.338)	.253
10	3.572	1.443	0.156	-0.701	-.098 (.127)	.726 (.696)	.493
4	2.743	1.180	0.528	0.257	.033 (239)	.666 (.676)	.458
15	3.015	1.434	0.461	-0.276	.181 (354)	.557 (.613)	.406
		설명 분산			23.4% (26.5%)	19.0% (22.5%)	
		고유값			1.641	1.331	
		Cronbach's α			.719	.695	
		McDonald's ω			.730	.697	

주. KMO = .715, Bartlett 구형성 검정 $\chi^2(21) = 533.819$, $p < .001$. 형태계수가 .3 이상인 경우 굵게 표시. 전체 문항 신뢰도: Cronbach's α = .731, McDonald's ω = .790.

경제적 체제 정당화 척도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된 이 요인 모형과 더불어 모든 문항을 단일 요인으로 구성한 대안 모형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때, 두 모형 모두에 문항의 형식적 유사성에 기인하는 문항 간 상관을 반영하고자, 경제적 불평등을 자연적인 현상으로 여기는 경향을 묻는 3번 문항과 9번 문항의 잔차 상관을 허용하였다. 같은 논리에 따라 대안 모형에서는 추가적으로 역채점 문항(4번, 10번, 15번 문항)의 잔차 상관을 허용하였다.

분석 결과, 이 요인 모형과 대안 모형의 적합도는 모두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 있었다(표 7). 그러나, 대안 모형의 Akaike information criterion (AIC)와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BIC)가 이 요인 모형에 비해 높았다. 또한 대안 모형에서 역채점 문항들의 요인 부하량은 .054–.152 수준으로 낮았던 반면, 해당 문항 간의 상관계수는 .611–.631 사이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역채점 문항들을 별도의 요인으로 구성하는 것이 타당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통계적 적합도와 이론적 해석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요인 모형이 한국판 경제적 체제 정당화 척도의 요인 구조를 가장 적절히 반영한다고 판단하였다(그림 2). 이 요인 모형에서 두 요인 간 상관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r = .138, p = .101).

경제적 체제 정당화 척도의 요인별 신뢰도, AVE, 요인 간 상관 및 HTMT는 표 8에 제시되어 있다.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정당화 요인의 경우 비록 AVE가 수렴 타당도를 지지할 수 있는 기준을 밑돌았지만, 모든 문항의 부하량이 .6 이상이며 McDonald's ω가 .7 이상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요인이 수렴 타당도를 지닌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경제적 불평등의 불공정성 요인의 경우 부하량, AVE, 그리고 McDonald's ω가 모두 기준치 이상의 수치를 보여 수렴 타당도를 지닌다고 판단하였다. 두 요인 사이의 HTMT 역시 기준치 미만으로 나타났으며, 따라서 변별 타당도가 충족되었다고 판단하였다.

표 7. 경제적 체제 정당화 척도의 확인적 요인분석 적합도 (연구 2, n = 400)

모형	χ^2	df	p	AIC	BIC	CFI	RMSEA [90% CI]	SRMR
이 요인 모형	12.328	12	.420	9164.483	9228.346	1.000	.010 [.000, .061]	.030
대안 모형: 단일 요인 모형	9.959	10	.444	9164.846	9236.692	1.000	.000 [.000, .063]	.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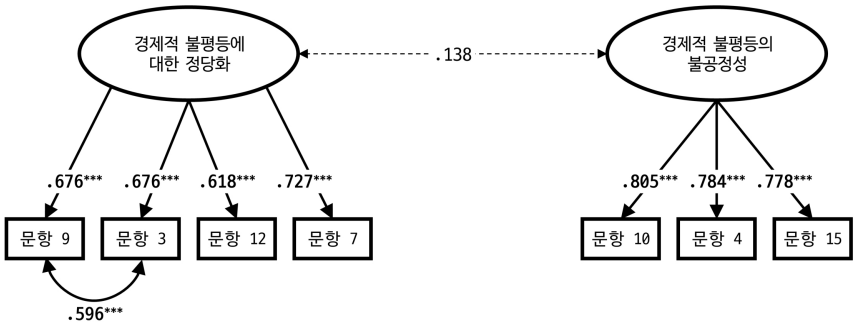


그림 2. 경제적 체제 정당화 척도의 최종 모형 및 표준화 계수(연구 2, n = 400).
*** p < .001

표 8. 경제적 체제 정당화 척도의 신뢰도, AVE, 요인 간 상관, 그리고 HTMT (연구 2, n = 400)

요인	*M*	*SD*	α	ω	AVE	1	2
1.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정당화	3.748	1.167	.806	.720	.456		.084
2. 경제적 불평등의 불공정성	3.796	1.344	.829	.830	.620	.138	

주. 상관행렬에서 대각선 아래는 요인 간 상관을, 그리고 대각선 위는 HTMT를 의미. 전체 문항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 .720, McDonald's ω = .789.

탐색적 분석: 경제 활동 상태에 따른 경제적 체제 정당화 점수의 집단 간 차이

이상의 분석을 통해 경제적 체제 정당화 척도의 요인 구조가 서로 다른 특성의 두 표본(경력 5년 이상의 직장인 vs. 구직자)에서 유지됨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척도의 형태적 측정 불변성에 대한 예비적 증거로 볼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서로 다른 경제적 지위의 집단이 경제적 체제 정당화 척도 점수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탐색해 보고자 요인 별 총점 기반 t-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정당화 요인에서는 직장인(M = 3.857, SD = 1.111)과 구직자(M = 3.748, SD = 1.167)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t(732) = 1.286$, $p = .199$, $d = 0.095$. 반면, 경제적 불평등의 불공정성 요인에서는 직장인(M = 3.110, SD = 1.066)보다 구직자(M = 3.796, SD = 1.344)가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t(732) = -7.552$, $p < .001$, $d = -0.558$. 문항의 내용만을 고려한다면, 이는 아직 일자리를 얻지 못한 사람들이 경제적 불평등을 더욱 불공정하다고 여김을 시사한다.

논 의

연구 2에서는 서로 다른 모집단에서 추출된 두 표본을 활용하여 경제적 체제 정당화 척도의 7문항 이 요인 구조를 규명하였고, 요인 내 수렴 타당도와 및 요인 간 변별 타당도를 지지하는 근거를 확인하였다. 서로 다른 특징을 지닌 두 표본이 활용되었음에도 경제적 체제 정당화 척도의 요인 구조가 확증되었다는 점은 해당 척도의 형태 불변성을 예비적으로 지지한다. 이를 바탕으로 수행된 표본 간 비교에서는 경제적 불평등의 불공정성 요인의 평균 점수가 일자리 획득 여부에 따라 달라짐을 확인하였다.

다만, 이상의 집단 간 차이가 실질적으로 경제적 불평등을 정당화하려는 심리적 기제의 실질적인 차이에 기인한 것인지 단정하기 어렵다. 연구 2가 척도의 내적 구조 차원의 타당도만을 제한적으로 분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거쳐 일관되지 않은 양상의 요인 간 상관이 나타났기에 두 요인이 모두 경제적 체제 정당화를 적절히 반영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이에 연구 3에서는 경제적 체제 정당화 척도를 구성하는 요인들이 유관 개념들과 이론에 부합하는 상관관계를 맺는지 경험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척도 및 개별 요인의 타당도에 대한 추가 증거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 3. 시장 체제 정당화 척도와 경제적 체제 정당화 척도의 추가 타당화

연구 3에서는 앞선 연구 1과 2에서 조망하지 못한 측면의 타당도를 추가로 입증하고자 하였다. 첫 번째로 체제 정당화 척도 간 수렴 및 변별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이때 두 경제 체제에 대한 정당화 척도와 더불어 일반적 체제 정당화(general system justification) 척도를 함께 분석하여,

이들이 서로 관련성을 가지면서도 구분되는 개념을 측정하는지 경험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두 번째로 법칙론적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체제 정당화 이론에 따르면 개인의 체제 정당화 동기는 우익권위주의, 사회지배지향성, 그리고 보수주의 같은 사상적 신념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Jost & Hunyady, 2005). 이에 두 경제 체제에 대한 정당화 척도가 해당 변수들과 이론적 예측에 부합하는 상관을 보이는지 확인함으로써 척도의 타당도 및 구성 요인들의 적절성을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과정을 통해 타당도를 입증한 척도가 측정 불변성을 보이는지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체제 정당화와 관련된다고 보고된 성별(Dirilen-Gumus, 2011; Goldsmith et al., 2013; Silva et al., 2025), 연령(Carcati, 2019; Vargas-Salfate et al., 2018), 그리고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Jost, Pelham, et al., 2003; Li et al., 2020)에 따라 척도의 요인 구조가 변화하지 않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 3은 연구자가 속한 기관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사 및 승인을 받아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수행되었다 (승인번호: 2025-09-044-003).

방 법

참가자

연구 3의 자료는 조사 전문 기관 인바이트를 통해 수집되었다. 연구 1과 2에 참여하지 않은 만 20세 이상 69세 사이의 성인 400명이 온라인으로 조사에 참여하였다(평균 연령 45.6세; 표 9). 참가자는 성별과 연령에 따라 비례할당표집되었다.

표 9. 참가자의 인구통계학 정보 (연구 3, n = 400)

	N(%)		N(%)
성별		**교육수준**	
남성	205 (51.25%)	고졸 이하	59 (14.75%)
여성	195 (48.75%)	2-3년제 대학 졸업	51 (12.75%)
연령대		4년제 대학 졸업	235 (58.75%)
20대	66 (16.50%)	석사 졸업 이상	55 (13.75%)
30대	75 (18.75%)	**지지 정당**	
40대	82 (20.50%)	더불어민주당	142 (35.50%)
50대	93 (23.35%)	국민의힘	54 (13.50%)
60대	84 (21.00%)	조국혁신당	10 (2.50%)
월 평균 가구 소득		진보당	4 (1.00%)
200만원 미만	30 (7.50%)	개혁신당	12 (3.00%)
200만원-399만원	121 (30.25%)	기본소득당	2 (0.50%)
400만원-599만원	105 (26.35%)	사회민주당	1 (0.25%)
600만원-799만원	63 (15.75%)	기타	1 (0.25%)
800만원-999만원	50 (12.50%)	지지정당 없음	174 (43.50%)
1,000만원 이상	31 (7.75%)		

측정 도구

모든 부정 문항의 점수는 역채점된 후 분석에 활용되었다.

시장 및 경제적 체제 정당화

연구 1과 2를 통해 요인 구조를 확인한 시장 체제 정당화 18문항과 경제적 체제 정당화 7문항이 사용되었다.

일반적 체제 정당화

일반적 체제 정당화의 측정에는 Kay & Jost (2003)의 8문항을 통일연구원의 KINU통일의식조사 2023 (이상신 등, 2023)에서 번역한 8문항을 사용하였다(예, “대체로 우리 사회는 공평한 것 같다”).

우익권위주의

우익권위주의는 Manganelli Rattazzi 등(2007)의 우익권위주의 척도 중 권위주의적 공격성 및 복종 요인의 7문항을 KINU통일의식조사 2023 (이상신 등, 2023)에서 번역한 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예, “우리나라를 망쳐놓고 있는 극단주의와 싸워서 끝장낼 수 있는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하다”).

사회지배지향성

사회지배지향성은 Ho 등(2015)이 제안한 SDO_7(s) 척도를 KINU통일의식조사 2023 (이상신 등, 2023)에서 번역한 8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집단 기반 지배(예, “어떤 집단은 상층부에, 다른 집단들은 하층에 있을 때 이상적인 사회가 될 수 있다”)와 반평등주의(예, “집단 사이의 평등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의 두 하위 차원으로 구성되나, 본 연구에서는 전체 문항 점수의 평균을 법칙론적 타당도 분석에 사용하였다.

보수주의

보수주의의 경우 참가자의 정치적 성향을 묻는 단일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참가자는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5점(매우 진보적)에서 5점(매우 보수적) 사이로 표시하였다.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의 측정에는 MacArthur 사다리(Adler et al., 2000)가 사용되었다. 참가자는 대한민국 사회를 최하층(1점)에서 최상층(10점)의 10단계로 구분할 때 자신이 위치한다고 생각하는 지점을 표시하였다.

분석

체제 정당화 척도 간 수렴 및 변별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시장 체제 정당화 척도, 경제적 체제 정당화 척도, 그리고 일반적 체제 정당화 척도를 모두 포함한 측정 모형을 구축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모수의 추정에는 MLM이 사용되었다. 이때, 문항의 내용 및 형식에 기반한 문항 간 상관을 모형에 반영하기 위해 일부 문항 간 잔차 상관을 허용하였다. 구체적으로, 경제적 체제 정당화 척도의 경우 연구 2와 동일하게 3번과 9번 문항 사이의 상관을 허용하였다. 일반적 체제 정당화의 경우 역채점 문항인 2번과 7번, 그리고 정치 및 정책에 대한 인식을 묻는 문항인 5번과 6번 사이의 상관을 허용하였다. 측정 모형의 적합도 판단과 수렴 및 변별 타당도의 판단에는 연구 1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였다.

법칙론적 타당도 분석에서는 시장 체제 정당화 척도와 경제적 체제 정당화 척도의 개별 요인들과 우익권위주의, 사회지배지향성, 그리고 보수주의 사이의 상관계수 및 그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시장 체제 정당화 척도와 경제적 체제 정당화 척도의 경우 개별 요인 별 총점이, 우익권위주의와 사회지배지향성의 경우 전체 문항의 총점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측정 불변성 분석에는 다집단 확인적 요인분석이 사용되었다. 집단 간에 척도 요인 구조의 형태, 부하량, 절편, 그리고 잔차가 동일하다는 제약을 하나씩 추가하면서 개별 모형의 적합도 및 적합도 변화량을 순차적으로 확인하였다. 개별 모형의 적합도는 연구 1과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적합도 변화량의 경우 보수적 기준인 $\Delta\chi^2$ 검정과 더불어 ΔCFI (> -.01), ΔRMSEA (< .015) 및 ΔSRMR (부하량 불변성의 경우 < .03, 절편 및 잔차 불변성의 경우 < .01)을 기준으로 판단하였다(Chen, 2007; Cheung & Rensvold, 2002). 특정 제약 단계에서 불변성 판단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부분적 측정 불변성 검증을 추가로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lavaan (Rosseel, 2012)에서 제공하는 lavTestScore() 함수를 사용하여 모형 적합도 저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문항을 식별하였으며, 해당 문항에 대한 제약을 해제한 뒤 모형의 적합도 및 적합도 변화량을 재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특정 단계에서의 부분적 측정 불변성이 확인되면 다음 단계의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때, 측정 불변성 모형 간의 내재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앞선 단계에서 제약이 해제된 문항은 이후 단계에서도 집단 간 불변성 제약을 가하지 않았다. 측정 불변성 분석에 사용된 집단 변수 중 연령은 중앙값(46세) 이하의 집단(n = 202)과 이를 초과하는 집단(n = 198)으로 범주화되어 사용되었다.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의 경우 응답 분포를 고려하여 5점 이하의 집단(n = 176)과 6점 이상의 집단(n = 224)으로 범주화하여 사용하였다.

결 과

체제 정당화 척도 간 관계

시장 체제 정당화, 경제적 체제 정당화, 그리고 일반적 체제 정당화가 모두 포함된 측정 모형의 적합도는 $\chi^2(477)$ = 899.340, CFI = .859, RMSEA = .052, 90% CI [.047, .057], SRMR = .071으로 나타났다. 비록 CFI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을 밑돌았지만, RMSEA와 SRMR이 가장 엄격하다고 여겨지는 Hu & Bentler (1999)의 기준(RMSEA < .06; SRMR < .09)을 충족함을 고려하여 모형의 적합도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하였다.

해당 측정 모형에서 각 척도 별 요인 부하량은 다음과 같다. 시장 체제 정당화 척도 중 시장 원리에 따른 결과의 공정성 요인은 .471–.667, 시장의 절차적 측면의 공정성 요인은 .539–.703, 시장의 절차적 측면의 불공정성 요인은 .452–.554의 부하량을 보였다. 경제적 체제 정당화 척도 중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정당화 요인은 .591–.704, 경제적 불평등의 불공정성 요인은 .481–.543의 부하량을 보였다. 일반적 체제 정당화 척도의 문항들은 .316–.779의 요인 부하량을 보였다.

각 잠재변수의 기술통계량, 신뢰도, AVE, 요인 간 상관 및 HTMT는 표 10에 제시되어 있다. 각 척도의 신뢰도를 확인한 결과, 시장 원리에 따른 결과의 공정성, 시장의 절차적 측면의 공정성, 그리고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정당화는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내적 일관성을 보였다. 그러나 시장의 절차적 측면의 불공정성과 경제적 불평등의 불공정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신뢰도를 나타냈다.

체제 정당화 척도 간 관계를 살핀 결과, 모든 요인 쌍의 HTMT가 기준치를 넘지 않았으며, 따라서 요인 간 변별 타당도를 지지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시장 원리에 따른 결과의 공정성, 시장의 절차적 측면의 공정성, 그리고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정당화의 경우 요인 상호 간에, 그리고 일반적 체제 정당화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상의 결과는 해당 요인들이 서로 변별되면서도, 체제 정당화라는 구성개념을 공통으로 반영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두 역채점 문항 요인(시장의 절차적 측

표 10. 요인별 신뢰도, AVE, 상관, 그리고 HTMT (연구 3, n = 400)

요인	*M*	*SD*	α	ω	AVE	1	2	3	4	5	6
1. 시장 원리에 따른 결과의 공정성	4.559	0.819	.812	.815	.335		.319	.128	.564	.174	.294
2. 시장의 절차적 측면의 공정성	4.458	0.880	.815	.817	.429	.406***		.161	.538	.071	.285
3. 시장의 절차적 측면의 불공정성	3.371	0.844	.494	.499	.253	-.024	.189		.155	.312	.149
4.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정당화	4.121	1.112	.765	.716	.429	.591***	.580***	.169		.180	.397
5. 경제적 불평등의 불공정성	3.249	0.936	.524	.528	.275	.069	-.067	.343**	.212*		.112
6. 일반적 체제 정당화	3.710	0.916	.805	.760	.336	.421***	.497***	.156	.549***	-.031	

주.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추정된 잠재 요인 간 상관계수를 표기. 대각선 아래는 요인 간 상관, 대각선 위는 HTMT를 의미.

* p < .05, ** p < .01, *** p < .001

면의 불공정성, 경제적 불평등의 불공정성)은 일반적 체제 정당화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각각 r = .156, p = .097과 r = -.031, p = .728). 이들이 관여된 상관관계 중 가장 강한 것은 두 요인 사이의 상관이었다(r = .343, p = .008). 이러한 결과는 해당 역채점 요인들이 체제 정당화라는 구성개념보다 다른 특징(예, 채점 방식)에 기반한 분산을 공유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법칙론적 타당도

다음으로 시장 체제 정당화 척도와 경제적 체제 정당화 척도의 하위 요인들과 이론적 관련 변수(우익권위주의, 사회지배지향성, 보수주의) 사이의 상관을 확인하였다. 비록 앞선 분석에서 역채점 요인들(시장의 절차적 측면의 불공정성, 경제적 불평등의 불공정성)의 내적 일관성이 낮게 나타났지만, 척도의 타당도를 보다 자세히 탐색하기 위해 두 요인에 대해서도 합산 점수를 계산한 뒤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11에 제시되어 있다. 시장 원리에 따른 결과의 공정성과 시장의 절차적 측면의 공정성, 그리고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정당화 요인은 세 이론적 관련 변수 모두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해당 세 요인이 체제 정당화라는 구성개념을 적절히 반영함을 추가로 입증한다. 반면, 시장의 절차적 측면의 불공정성 요인은 어떠한 이론적 관련 변수와도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지 않았다.

표 11. 법칙론적 타당도 (연구 3, n = 400)

변수	*M*	*SD*	α	ω	시장 원리에 따른 결과의 공정성	시장의 절차적 측면의 공정성	시장의 절차적 측면의 불공정성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정당화	경제적 불평등의 불공정성
우익권위주의	4.539	1.001	.780	.816	.110*	.270***	-.005	.320***	-.021
사회지배지향성	3.434	0.775	.718	.778	.260***	.170**	.058	.460***	.250***
보수주의	0.008	1.755	-	-	.210***	.240***	.065	.270***	.220***

* p < .05, ** p < .01, *** p < .001

경제적 불평등의 불공정성은 사회지배지향성 및 보수주의와는 유의한 상관을 보였지만, 우익권위주의와는 상관이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두 역채점 문항 요인들이 체제 정당화라는 구성개념을 적절히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는 앞선 결과를 뒷받침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시장 체제 정당화 척도(시장 원리에 따른 결과의 공정성, 시장의 절차적 측면의 공정성)와 경제적 체제 정당화 척도(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정당화)의 일부 요인만이 상응하는 체제 정당화를 측정하기에 심리측정학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요인들만을 추출하여 척도를 재구성한 뒤, 측정 불변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측정 불변성[1)]

성별, 연령, 그리고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시장 체제 정당화 척도의 측정 불변성 분석 결과는 표 12에 제시되어 있다. 성별과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분석 중 일부 개별 모형의 적합도(CFIs > .896, RMSEAs < .063) 및 적합도 변화량(ΔCFI > -.013)이 기준치를 벗어났다. 그러나 그 폭이 크지 않은 점, 그리고 다른 지표들이 기준치를 벗어나지 않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전반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시장 체제 정당화 척도가 성별과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해 측정 불변성을 지닌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연령에 대한 측정 불변성 분석의 경우 절편 불변성 단계에서 기준치를 크게 벗어나는 개별 모형 적합도 및 적합도 변화량이 나타났다 (CFI = .887, RMSEA = .068, ΔCFI = -.026). 이에 적합도 저하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20번 문항의 제약을 해제한 뒤 부분적 불변성 검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부분적 절편 불변성 모형과 부분적 잔차 불변성 모형에서 개별 모형의 RMSEA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을 소폭 상회한 점을 제외하면(< .062), 개별 모형의 적합도 및 적합도 변화량 지표는 모두 만족스러운 수준이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시장 체제 정당화 척도가 연령에 대해서는 부분적 측정 불변성을 지닌다고 판단하였다.

경제적 체제 정당화 척도의 분석 결과는 표 13에 제시되어 있다. 성별과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분석에서 일부 개별 모형의 RMSEA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을 다소 웃돌았다(< .088). 다만, 자유도가 작은 모형에서는 RMSEA가 과다 추정되기에 다른 적합도 지수를 활용해 모형 적합도를 판단하는 것이 권장된다(Kenny et al., 2015). 다른 두 지수는 모두 기준치 이내의 수치를 보였다. 적합도 변화량의 경우 가장 보수적인 지표인 $\Delta\chi^2$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를 바탕으로 경제적 체제 정당화 척도가 성별 및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해 측정 불변성을 지닌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연령에 대한 측정 불변성 분석 중 절편 불변성 단계에서 기준치를 크게 벗어나는 개별 모형 적합도 (RMSEA = .081) 및 적합도 변화량이 나타났다(ΔCFI = -.020, ΔRMSEA = .036, ΔSRMR = .019). 이에 적합도 저하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3번 문항의 제약을 해제한 뒤 부분적 불변성 검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부분적 절편 불변성 모형의 RMSEA (.062)와 ΔRMSEA (.017)가 기준치를 소폭 상회한 점을 제외하면, 개별 모형의 적합도 및 적합도 변화량은 모두 만족스러운 수치를 보였다. 이를 바탕으로, 경제적 체제 정당화 척도가 연령에 대해서는 부분적 측정 불변성을 지닌다고 판단하였다.

탐색적 분석: 인구통계학적 집단 간 비교

두 척도의 측정 불변성을 지지하는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성별, 연령, 그리고 주관적 사

1) 두 척도에 역채점 문항 요인을 유지한 경우에도 측정 불변성 분석 결과의 양상은 동일하였다.

표 12. 시장 체제 정당화 척도의 측정 불변성 검증 (연구 3, n = 400)

	χ^2	df	$p(\chi^2)$	CFI	RMSEA	SRMR	$\Delta\chi^2$	Δdf	$p(\Delta\chi^2)$	ΔCFI	ΔRMSEA	ΔSRMR
모형 적합도	198.242	89	< .001	.915	.063	.059						
성별												
형태	290.679	178	< .001	.915	.063	.062						
부하량	304.725	191	< .001	.915	.061	.068	13.262	13	.428	.000	-.002	.006
절편	328.617	204	< .001	.909	.061	.070	25.211	13	.022	-.006	.000	.002
잔차	358.228	219	< .001	.896	.063	.074	28.487	15	.019	-.013	.002	.004
연령												
형태	293.682	178	< .001	.911	.064	.064						
부하량	305.712	191	< .001	.913	.062	.068	10.882	13	.621	.002	-.002	.004
절편	357.650	204	< .001	.887	.068	.073	77.139	13	< .001	-.026	.006	.005
절편 (부분)	331.138	203	< .001	.904	.062	.070	28.354	12	.005	-.009	.000	.002
잔차 (부분)	349.771	207	< .001	.900	.062	.074	19.332	14	.153	-.004	.000	.004
주관적 SES												
형태	287.090	178	< .001	.912	.062	.064						
부하량	303.557	191	< .001	.909	.061	.071	16.163	13	.240	-.003	-.001	.007
절편	321.336	204	< .001	.907	.060	.072	16.793	13	.209	-.002	-.001	.001
잔차	328.914	219	< .001	.911	.056	.075	11.778	15	.696	.004	-.004	.003

주. SES = 사회경제적 지위.

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경제 체제에 대한 두 가지 형태의 정당화가 차이를 보이는지 추가로 탐색하였다. 이때, 두 척도 모두 연령에 대한 측정 불변성이 부분적으로 입증되었기에 집단 간 비교에는 잠재 평균 분석이 활용되었다.

잠재 평균 분석 결과는 표 14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 결과,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잠재 평균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연령의 경우, 높은 집단에서 낮은 집단에 비해 시장의 절차적 측면의 공정성 요인의 잠재 평균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는 연령이 많을수록 시장의 절차적 측면을 더 강하게 정당화함을 시사한다. 이에 반해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정당화는 연령 집단 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는 나이가 증가할수록 체제 정당화 이데올로기(예, 보수주의)에 더 동조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경제적 불평등 차원에 한해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선행 연구의 관찰과 일치한다(Cornelis et al., 2009).

마지막으로,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에서는 세 요인 모두 유의미한 잠재 평균 차이를 보였다. 모두 주관적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시장 경제 체제와 경제적 불평등을 더 강하게 정당화함을 시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지위가 낮을수록 더 강한 체제 정당화를 보인다는 지위-정당성 가설(status-legitimacy hypothesis; Brandt, 2013; Jost, Pelham, et al., 2003)에는 반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해당 가설을 다룬 후속 연구들이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와 체제 정당화 사이의 정적 상관을 일관되게 보고하였음을 고려하면 (Brandt, 2013; Li et al., 2020; Valdes et al., 2023),

표 13. 경제적 체제 정당화 척도의 측정 불변성 검증 (연구 3, n = 400)

	χ^2	df	$p(\chi^2)$	CFI	RMSEA	SRMR	$\Delta\chi^2$	Δdf	$p(\Delta\chi^2)$	ΔCFI	ΔRMSEA	ΔSRMR
모형 적합도	2.421	1	.120	.994	.080	.018						
성별												
형태	2.812	2	.245	.997	.057	.015						
부하량	3.399	5	.639	1.000	.000	.018	0.362	3	.948	.003	-.057	.003
절편	5.71	8	.680	1.000	.000	.025	2.397	3	.494	.000	.000	.007
잔차	12.804	12	.383	.998	.021	.041	7.38	4	.117	-.002	.021	.016
연령												
형태	4.264	2	.119	.991	.099	.016						
부하량	6.326	5	.276	.995	.045	.027	1.633	3	.652	.004	-.054	.011
절편	15.869	8	.044	.975	.081	.046	11.544	3	.009	-.020	.036	.019
절편 (부분)	10.916	7	.142	.987	.062	.035	4.350	2	.068	-.008	.017	.008
잔차 (부분)	14.818	10	.139	.984	.057	.040	3.880	3	.274	-.003	-.005	.005
주관적 SES												
형태	3.161	2	.206	.995	.068	.014						
부하량	10.281	5	.068	.980	.091	.047	7.157	3	.067	-.015	.023	.033
절편	12.884	8	.116	.984	.065	.050	1.408	3	.704	.004	-.026	.003
잔차	17.888	12	.119	.981	.057	.051	4.930	4	.295	-.003	-.008	.001

주. SES = 사회경제적 지위.

표 14. 시장 체제 정당화 척도의 잠재 평균 차이 검증 (연구 3, n = 400)

집단 변수	요인	잠재 평균 차이	Z	p	d
성별 (0 = 남성, 1 = 여성)	시장 원리에 따른 결과의 공정성	-0.212	-1.857	.063	-0.195
	시장의 절차적 측면의 공정성	0.116	1.004	.315	0.107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정당화	-0.009	-0.071	.944	-0.008
연령 (0 = 46세 이하, 1 = 47세 이상)	시장 원리에 따른 결과의 공정성	0.077	0.705	.481	0.079
	시장의 절차적 측면의 공정성	**0.284**	**2.507**	**.012**	**0.277**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정당화	0.087	0.744	.457	0.087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0 = 낮음, 1 = 높음)	**시장 원리에 따른 결과의 공정성**	**0.499**	**4.391**	**< .001**	**0.542**
	시장의 절차적 측면의 공정성	**0.337**	**2.958**	**.003**	**0.350**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정당화	**0.411**	**3.110**	**.002**	**0.345**

주. p <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굵게 표시.

본 연구의 결과는 최근의 실증적 관찰들과 궤를 같이하는 타당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논 의

연구 3에서는 변별 타당도 분석을 통해 시장 체제 정당화 척도와 경제적 체제 정당화 척도를 구성하는 요인들이 서로 간에, 그리고 일반적 체제 정당화와 서로 구분되는 개념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개념 간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시장 체제 정당화 척도의 일부 요인(시장 원리에 따른 결과의 공정성, 시장의 절차적 측면의 공정성)과 경제적 체제 정당화 척도 일부 요인(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정당화)이 상호 간에, 그리고 일반적 체제 정당화 및 세 종류의 이론적 유관 개념과 정적 상관을 지님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해당 세 요인이 한국인의 경제 체제에 대한 정당화를 타당하게 측정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반면, 역채점 문항으로 구성된 시장의 절차적 측면의 불공정성 요인과 경제적 불평등의 불공정성 요인은 낮은 신뢰도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체제 정당화 척도 요인 및 이론적 유관 변수와 불완전한 양상의 상관을 나타냈다. 특히 이들 요인이 가장 강한 상관을 보인 대상이 서로였다는 점은, 두 요인이 체제 정당화라는 심리적 기제보다는 다른 원천(예, 채점 방식)에 기인한 공분산을 반영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역채점 문항으로 구성된 두 요인을 척도에서 제외하여 최종 척도를 구성하였다.

재구성된 시장 체제 정당화 척도와 경제적 체제 정당화 척도에 대하여 측정 불변성 분석을 수행한 결과, 두 척도 모두 성별과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해서는 완전한 측정 불변성을, 연령에 대해서는 부분적 측정 불변성을 지님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잠재 평균 분석을 수행하여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았을 때, 최근 선행 연구들의 실증적 관찰과 일치하는 방향의 연령 및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차이를 관찰하였다. 최종적으로 연구 3은 두 요인(시장 원리에 따른 결과의 공정성, 시장의 절차적 측면의 공정성)의 시장 체제 정당화 척도와 단일 요인(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정당화)의 경제적 체제 정당화 척도가 상응하는 경제 체제에 대한 정당화를 신뢰롭고 타당하게 측정할 수 있는 도구임을 확인하였다.

종합 논의

체제 정당화는 사회심리학 안팎에서 현실의 사회적 체제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과 태도를 설명할 수 있는 개념으로 주목받아 왔다. 다양한 양상의 체제 정당화 중 특히 경제 체제에 대한 사상적 지지를 반영하는 시장 체제 정당화와 경제적 체제 정당화는 사회 · 경제 · 정치적 태도와 행동을 폭넓게 이해하는 데 유용한 개념이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을 대상으로 이를 타당하게 측정할 수 있는 도구는 아직 제안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Jost, Blount 등(2003)과 Jost & Thompson (2000)의 척도를 기반으로 한국인의 경제 체제에 대한 정당화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 1과 2에서는 각각 시장 체제 정당화 척도와 경제적 체제 정당화 척도의 요인 구조를 탐색 및 확증하였으며, 연구 3에서는 일반적 체제 정당화 및 관련 신념과의 관계 분석을 통해 구성 및 법칙론적 타당도를 확인하는 한편, 두 척도의 성별, 연령, 그리고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측정 불변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가 제안하는 두 척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활용 방안은 다음과 같다.

연구 1에서는 한국어로 번역된 시장 체제 정당화 척도가 삼 요인 구조를 지님을 확인하였다. 첫 번째 요인은 시장 논리에 의한 의사결정 및 결과의 공정성과 관련되었고(시장 원리에 따른 결과의 공정성, 9문항), 두 번째와 세 번째

요인은 시장 경제 자체 및 절차적 측면의 공정성과 관련되지만 문항의 서술 방향에 따라 구분되었다(시장의 절차적 측면의 공정성, 6문항; 시장의 절차적 측면의 불공정성, 3문항). 주목할 점은 시장의 절차적 측면의 불공정성 요인이 척도 내의 다른 두 요인과 약한 관련성을 보였을 뿐 아니라(연구 1, 연구 3), 이론적으로 유관한 다른 변수들과도 유의한 상관을 거의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다(연구 3). 오히려 해당 요인은 동일한 역채점 형식을 취한 경제적 체제 정당화 척도의 경제적 불평등의 불공정성 요인과 가장 강한 상관을 보였다. 이는 해당 요인이 개인의 체제 정당화보다 부정 문항이라는 방법론적 특징을 더 강하게 반영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해당 역채점 문항 요인을 제외하고, 시장 원리에 따른 결과의 공정성과 시장의 절차적 측면의 공정성으로 구성된 두 요인 15문항을 사용하여 시장 체제 정당화를 측정할 것을 권장한다. 효율적인 측정을 위해 비교적 적은 수의 문항만으로 만족스러운 신뢰도 및 타당도를 확보한 시장의 절차적 측면의 공정성 요인만을 사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Jost, Blount 등(2003)은 시장 체제 정당화 척도가 절차적 측면의 공정성과 시장 원리에 따른 결과의 공정성의 두 내용을 묻는다고 설명하였지만,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드물었다. 본 연구는 요인분석을 통해 두 차원이 경험적으로 분리될 수 있음을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연구 1), 각 요인이 관련 변수들과 차별적인 관계를 맺음을 규명하였다(연구 3). 구체적으로, 집단 간 위계와 불평등에 대한 선호인 사회지배지향성은 시장 원리에 따른 결과의 공정성 요인과 더 강한 상관을 보였다, r = .260 vs. .170, Z = 1.698, p = .045. 하지만 규칙과 권위에 대한 복종을 강조하는 우익권위주의는 시장의 절차적 측면의 공정성 요인과 더 강한 관련성을 보였다, r = .270 vs. .110, Z = 3.004, p < .001. 이는 두 요인이 단순한 측정 방식의 차이를 넘어, 시장 체제의 서로 다른 측면을 정당화하려는 이질적인 심리적 기제를 포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본 연구가 이러한 차별적 기제를 검증하기 위해 설계된 것은 아니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시장 체제 정당화의 두 측면이 갖는 고유한 영향력을 보다 엄밀한 가설 검증 절차를 통해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연구 2에서는 경제적 체제 정당화 척도의 두 요인 구조를 확인하였다. 두 요인은 각각 경제적 불평등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논리를 수용하는 정도(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정당화, 4문항)와 경제적 불평등을 불공정하다고 인식하는 정도(경제적 불평등의 불공정성, 3문항)를 반영하였다. 그러나 두 요인 간 상관은 연구 2와 연구 3 전반에 걸쳐 일관되게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이론적 관련 변수와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연구 3),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정당화 요인은 이론적 예측에 부합하는 상관을 일관되게 보였던 반면, 경제적 불평등의 불공정성 요인의 경우 일관되지 않은 양상의 상관을 나타냈다. 나아가 경제적 불평등의 불공정성 요인은 같은 역채점 요인인 시장의 절차적 측면의 불공정성 요인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다는 점에서, 해당 요인 역시 측정 방식에 따른 방법론적 특징을 더 강하게 반영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제적 체제 정당화의 측정에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정당화 4문항만을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만약 문항의 수나 다양성 등을 이유로 7문항을 모두 사용하고자 한다면 분석에 앞서 반드시 개별 요인의 신뢰도와 요인 간 상관관계를 점검해야 한다. 대안적으로는 역채점 문항의 진술 방식을 긍정형으로 수정하여 사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Wong et al., 2003).

두 척도 모두에서 역채점 문항으로 구성된 요인들이 척도 내 다른 요인 및 유관 구성개념과의 관계 측면에서 낮은 타당도를 보였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현상은 본 연구만의 특이한 사례는 아니다. 선행 연구에서도 문항의 진술 방식에 따라 요인이 분리되거나, 서로 다른 진술 방식의 문항들이 서로 낮은 상관을 보

이는 현상이 보고된 바 있다(예, 안혜정, 2019; 홍영근 등, 2011; Joo et al., 2025). 이와 같은 문항 진술 효과(item wording effect; Kam, 2018)는 역채점 문항의 인지적 처리 과정에 기인할 수 있다. 즉, 응답자가 부주의하여 문항의 진술 방향을 간과하거나, 역채점 문항의 높은 인지적 부하로 인해 응답을 적절히 생성하지 못했거나, 또는 역채점 문항을 정적 문항의 반대 의미로 해석하지 못했기에 역채점 문항 요인과 다른 요인 간의 상관이 낮아진 것이다(Elek et al., 2025).

한편, 이러한 결과는 방법론적 특성을 넘어 한국인 특유의 체제 정당화 기제를 반영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문화권은 서로 모순되는 태도나 가치의 공존을 더 자연스럽게 수용하는 변증법적 사고에 익숙한 경향을 보인다(Wong et al., 2003). 이러한 문화권에서는 사회 체제에 대한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인식 자체가 반드시 체제를 정당화하려는 시도의 부재를 의미하지 않을 수 있다. 실제로 안혜정 등(2017)은 한국인들이 “한국 사회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체제 정당화라고 볼 수 있는 구체적 행동 양상”을 보임을 지적한 바 있다(p. 267).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역채점 문항 요인들이 척도 내의 다른 요인과 분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낮은 타당도를 보인 이유는, 부정 문항이라는 방법론적 특성에 더해 해당 요인들이 체제 정당화와는 독립적인 별개의 속성(예, 비판적 현실 인식)을 반영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탐색적 요인분석 과정에서 탈락한 문항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인 특유의 체제 정당화 기제를 또 다른 측면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우선 경제적 체제 정당화 척도에서 기술적 능력주의 신념을 직접적으로 묻는 문항(1번, ‘열심히만 일하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은 낮은 공통분으로 인해 척도에서 제외됐지만, 이러한 신념을 바탕으로 경제적 격차를 해석하는 경향을 묻는 문항(12번, ‘경제적 지위는 사람의 성취에 대한 정당한 지표다’)은 최종 척도에 포함되었다. 이는 특정 정의 원칙이 실현되고 있다고 믿는 것과 별개로, 체제의 결함을 정당화하기 위해 해당 정의 원칙을 도구적으로 차용할 수 있는 한국인의 독특한 체제 정당화 기제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시장 체제 정당화 척도에서는 기업의 윤리성에 관해 묻는 문항들(4번, 9번, 12번)이 낮은 공통분을 보여 제외되었다. 이는 한국인들이 시장 체제를 정당화할 때 시장 내 주요 행위자(특히 기업)의 윤리적 정당성에 기반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해석은 한국인의 체제 정당화가 현실의 결함 인식과 공존할 수 있다는 선행 연구의 논의(안혜정 등, 2017)와 맥을 같이 한다.

본 연구에서 관찰된 이러한 독특한 양상은 서구 문화권에서 개발된 체제 정당화 척도를 한국 사회에 적용할 때 문화적 맥락을 반드시 고려해야 함을 역설한다. 안혜정 등(2017)은 “체제를 정당화하려는 심리적 동기는 한국 사람들에게도 나타나고 있지만, 한국 사회와 미국 사회에서 작동하고 있는 크고 작은 시스템의 내용과 작동 양식이 다르므로,” 체제 정당화를 연구할 때 “서구사회에서 적용된 방법론을 한국 사회에 그대로 옮겨와 적용하기 힘들다”고 지적한 바 있다(p. 269).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한국 사회의 구조적 및 문화적 특수성을 반영하여 경제 체제에 대한 한국인의 정당화 심리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론적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나아가 본 연구는 그동안 국내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세부적인 양상의 체제 정당화, 특히 경제 체제에 대한 정당화를 본격적으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지금까지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주로 체제 정당화의 일반적 기제에 천착해 온 반면(강민재, 최훈석, 2025; 김현정, 박상희, 2015; 안혜정, 2019; 안혜정 등, 2017; 오하석, 한성민, 2022), 경제적 영역에 특정하여 나타나는 한국인의 체제 정당화 현상은 학계의 주목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 본 연구는 경제 체제의 절차적 측면(시

장 경제 체제)과 결과적 측면(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정당화를 구분하여 측정하는 두 가지 척도를 제안함으로써, 관련 현상을 심층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실증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나아가 체제 정당화 연구에서 조사하고자 하는 현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체제에 대한 정당화로 발생하는 것인지 특정해야 한다는 비판(Crockett & Pendarvis, 2017)이 제기됨을 고려하면, 본 연구가 제안하는 두 척도는 향후 한국인의 경제관 및 체제 정당화 현상을 연구하는 데 세부적이고 적확한 가설 설정 및 검증을 가능케 할 것이다.

한계 및 제언

본 연구는 척도의 내적 구조뿐만 아니라 이론적 유관 변수와의 관계를 규명하여 척도의 타당도를 다각도로 검증하였다. 그러나 주된 분석이 상당수 요인분석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은 본 연구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더욱 다양한 심리측정학적 접근을 통해 척도의 타당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후속 연구에서는 문항반응이론을 적용하여 문항의 난이도나 변별도 등을 확인하여 개별 문항이 적절히 기능하는지 확인하거나, 차별문항기능분석을 통해 다양한 하위 집단 간 측정 불변성을 연구 3과는 다른 방식으로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비교적 많은 문항 수를 지닌 시장 체제 정당화 척도의 시장 원리에 따른 결과의 공정성 요인에 이를 적용한다면 연구 목적에 따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단축형 척도의 개발도 가능할 것이다.

두 척도를 통해 측정한 체제 정당화의 개인차가 이론에 부합하는 변산을 보이는지 확인함으로써 타당도를 추가로 입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개인의 체제 정당화 동기는 체제의 정당성과 안정성에 위협이 가해지는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활성화된다(Friesen et al., 2019). 본 연구에서 제안한 척도가 경제 체제에 대한 정당화를 적절히 측정한다면, 한국의 경제 체제에 대한 위협이 제기되었을 때 두 척도로 측정한 체제 정당화 점수 또한 유의미하게 상승할 것이다(Silva & Pereira, 2023, 연구 5). 또한 체제 정당화의 결과적 차원에서, 두 척도로 측정된 체제 정당화가 경제 체제 변화에 대한 저항을 높이는지(예, 파업이나 소비자 집단행동 등에 대한 비우호적 반응, Jost et al., 2017; Jost et al., 2012), 혹은 경제적 위기 상황 같은 부정적 사건에 의해 유발된 부정적 정서를 완화하는 기능을 수행하는지(Jost & Hunyady, 2003) 확인하는 작업 역시 척도의 타당도를 공고히 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다.

타당도 검증의 목적을 벗어나, 후속 연구에서는 두 가지 형태의 경제 체제에 대한 정당화가 현실 세계의 사회·경제·정치적 사건에 대한 대중의 해석 및 반응과 어떤 관련성을 지니는지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한국 경제 체제의 발전사 및 독특한 특징을 고려한 접근은 의미 있는 학술적 함의를 지닐 것으로 기대된다. 서구권 국가들과 달리, 한국은 정부 주도의 경제 개발 과정을 거쳐 신자유주의를 도입하였으며(이연호 등, 2002; 황상연, 강정모, 2009), 오늘날에도 국가가 시장 및 경제의 주요 행위자로 기능한다는 특징을 지닌다(윤홍근, 2013).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인들은 경제 체제를 정당화하는 데 있어 서구와는 차별적인 전략을 발달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인들은 경제 체제를 위협하는 사건에 직면했을 때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는 방식으로 대처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한국 경제 체제의 특수성을 반영한 후속 탐구는 한국인의 경제관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체제 정당화가 특정 경제 원리(예, 신자유주의 또는 정부의 적은 개입)에 대한 사상적 지지를 반영하는지, 아니면 기존 사회경제적 구조 자체에 대한 옹호를 반영하는 것인지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확장하는 데에도 흥미로운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두 척도는 심화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정치·이념적 갈등을 정교하

게 이해하고 해법을 모색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다. 현재 한국 사회의 정치적 양극화 담론에서 이념은 흔히 '보수 대 진보'와 같이 단일 차원으로 단순화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정치심리학 연구들에 따르면 개인의 사상적 신념 체계는 최소한 사회적 차원과 경제적 차원으로 구분되며 (Feldman & Johnston, 2014), 각 차원은 다시 각기 고유한 내용을 반영하는 세부 신념들로 구성된다. 본 연구는 한국인의 경제적 차원의 사상적 지향을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두 가지 도구를 제시한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를 활용하여 한국 사회를 구성하는 주요 집단들의 이념적 성향을 다각도로 프로파일링함으로써, 이분법적 구분을 넘어 집단 간 정치적 갈등의 실체를 더욱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적 갈등을 넘어, 두 경제 체제에 대한 정당화 척도는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사회적 위계를 정당화하는 심리적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 시장 논리는 경제 영역을 넘어 사회 전반에 퍼져 있으며 경제적 위계는 단순히 부의 차이를 넘어 개인의 가치와 지위를 규정하는 척도로 기능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경제 체제에 대한 정당화는 현존하는 사회적 위계 전반에 심리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기제로도 작동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선행 연구에 따르면 경제적 체제 정당화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낙인을 예측한다(Valtonen et al., 2026). 이러한 맥락에서 후속 연구는 본 연구가 제안하는 두 척도를 활용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학벌주의에 따른 차별,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위계 등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갈등의 구조를 실증적으로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러한 사회경제적 위계들이 정당화되는 과정에서 고지위 집단에 대한 숭배와 저지위 집단에 대한 배제가 나타나는지, 또는 그 결과로 사회경제적 위계에 대한 직접적인 지지 심리가 나타나는지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시도는 사회적 갈등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실효성 있는 사회 통합 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경험적 근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자소개

송찬기는 전북대학교 심리학과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체제 정당화 전략과 그 문화 차이, 그리고 사회, 정치, 소비 맥락에서 체제 정당화가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연구하고 있다.

문찬기는 전북대학교 심리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위계와 권력, 무례함, 그리고 규범에서의 문화 차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최근에는 사회, 정치, 그리고 조직 맥락에서 문화가 개인의 가치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개인 간 및 집단 간 관계에서 권력과 지위에 기인한 인지 · 정서 · 행동적 결과에 관해 연구하고 있다.

참고문헌

강민재, 최훈석 (2025). 정치성향과 재난 안전 체제개선을 위한 집합적 행동의도의 관계에서 체제정당화 기억의 매개효과: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를 예시로.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31(1), 143-166. https://doi.org/10.20406/kjcs.2025.2.31.1.143

국가데이터처. (2025, 01, 07). 주택임대료비율(소득 대비). 국가데이터처.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55

김수지 (2016, 12). 망가진 계층 사다리 '수저 계급론'. 신문과 방송, 124-125.

김영주, 나진경 (2018). 불평등의 심리적 영향에 관한 경험 연구 개관: 경제적 불평등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7(3), 313-347.

https://doi.org/10.22257/kjp.2018.09.37.3.313

김지범 (2025). **한국종합사회조사, 2003-2023 [누적자료]**. 한국사회과학자료원. https://doi.org/10.22687/KOSSDA-A1-CUM-0062-V3

김태심 (2020). 공정한 불평등?: 체제 정당화와 재분배 선호. **평화연구**, 28(1), 129-167. https://doi.org/10.21051/PS.2020.04.28.1.129

김현정, 박상희 (2015). 무관 정서의 점화가 체제 정당화 정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9(3), 111-127. https://doi.org/10.21193/kjspp.2015.29.3.006

남현동, 남태우, 오민정 (2024). 사회적 불평등 인식이 미래 기대에 미치는 영향 연구: 자기통제성과 행복감의 매개 역할. **한국행정논집**, 36(2), 249275. https://doi.org/10.21888/KPAQ.2024.6.36.2.249

박강산 (2024, 11, 10). [포커스] 2024년 청년 주거 실태. 대학원신문. http://gspress.cauon.net/news/articleView.html?idxno=30393

박진백 (2024). 경제적 부담: 결혼, 출산을 망설이게 하는 문제들. **미래정책 FOCUS**, 42, 38-39.

서원진, 이수민, 김미리혜, 김제중 (2018). 탐색적 요인분석 연구의 현황과 제언: 심리학 분야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9(1), 177-193. https://doi.org/10.16881/jss.2018.01.29.1.177

서한별, 손준종 (2022). 교사들의 능력주의 신념이 체제 정당화 신념과 사회정의 옹호 교육에 미치는 영향-90년대생 초등 교사를 중심으로. **교원교육**, 38(5), 351-374.

송찬기 (2023). 학벌 차별은 언제 그리고 왜 발생하는가?: 체제 정당화, 고정관념, 그리고 학벌에 따른 고용 차별. **사회과학연구**, 62(3), 157-180. https://doi.org/10.22418/JSS.2023.12.62.3.157

안혜정 (2019). **구조적 불평등에 따른 부정적 정서 경험이 변화행동에 미치는 효과: 체제 정당화와 개별정서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안혜정, 안정민, 서예지, 정태연 (2017). 한국 청년세대의 체제정당화: 의미 불일치 경험과 그 심리적 결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31(4), 247-275. https://doi.org/10.21193/kjspp.2017.31.4.012

오하석, 한성민 (2022). 능력주의, 체제 정당화, 그리고 정부신뢰. **현대정치연구**, 15(3), 139-186.

윤홍근 (2013). 한국정부의 경제적 역할 변화와 시장제도의 변화: 1980년대 초 '안정화시책'에 대한 담론제도주의 분석. **한국정치연구**, 22(1), 163-188.

이상신, 민태은, 윤광일, 구본상, Fiori, A., & Milani, M. (2023). **KINU 통일의식조사 2023: 한국의 자체적 핵보유 가능성과 여론**. 통일연구원. https://www.kinu.or.kr/main/module/report/view.do?idx=125264&nav_code=mai1674786094

이연호, 임유진, 정석규 (2002). 한국에서 규제국가의 등장과 정부-기업관계. **한국정치학회보**, 36(3), 199-222.

이용주, 장두석 (2025). 사회적 불평등에 관한 인식이 행복, 단체 참여 및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GRI연구논총**, 27(1), 271-299. https://doi.org/10.23286/gri.2025.27.1.010

이은정, 이은영, 김혜진 (2024). 청년 가구주의 주거불안정의 유형과 우울에 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 44(4), 443-468. https://doi.org/10.15709/hswr.2024.44.4.443

이인혁 (2024, 12, 27). 서울 집 사려면 '13년간 월급' 다 모아야.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22731221

이하진, 전태영 (2025, 03, 31). 불안정한 내 집 주거불안정의 시대. 영대신문. https://yumedia.yu.ac.kr/news/articleView.html?idxno=23363

이한준, 박종철 (2008). 반기업 정서와 자유 시장 경제에 대한 인식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 차원의 중요도 평가에 미치는 영향. 한국비영리연구, 7(2), 247-278.

임성호 (2024, 04, 05). 한경협 “10명중 6명 ‘시장경제가 미래번영에 좋은 시스템’ 인식”.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40404076300003

정기용, 조민혁, 민효상 (2022). 경기도 청년들의 결혼 및 출산 인식 차이에 관한 연구: 감성분석과 교차분석을 활용하여. GRI연구논총, 24(3), 119-148. https://doi.org/10.23286/gri.2022.24.3.005

홍세희 (2000). 특별기고: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홍영근, 문지혜, 조현재 (2011). 한국판-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척도 II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0(1), 117-134.

황경상, 권정혁, 이수민, 박채움 (2025, 03, 12). 33개 지표로 살펴본 ‘한국사회 불평등 보고서’.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503110500011

황상연, 강정모 (2009). 동아시아 경제발전 모형에 관한 연구. 경기연구원. https://www.gri.re.kr/web/contents/resreport.do?schM=view&schProjectNo=2522&schBookResultNo=3173

황선재 (2023). 경제적 불평등 인식 추이 및 원인 분석, 2016~2020. 한국사회학, 57(3), 1-32. https://doi.org/10.21562/kjs.2023.08.57.3.1

Adler, N. E., Epel, E. S., Castellazzo, G., & Ickovics, J. R. (2000). Relationship of subjective and objective social status with psychological and physiological functioning: Preliminary data in healthy, White women. *Health Psychology, 19*(6), 586-592. https://doi.org/10.1037/0278-6133.19.6.586

Agadullina, E., Ivanov, A., & Sarieva, I. (2021). How do Russians perceive and justify the status quo: Insights from adapting the system justification scales. *Frontiers in Psychology, 12*, 717-838. https://doi.org/10.3389/fpsyg.2021.717838

Azevedo, F., Jost, J. T., & Rothmund, T. (2017). “Making America great again”: System justification in the U.S. presidential election of 2016. *Translational Issues in Psychological Science, 3*(3), 231-240. https://doi.org/10.1037/tps0000122

Becker, S., & Sparks, P. (2016). Neither fair nor unchangeable but part of the natural order: Orientations towards inequality in the face of criticism of the economic system. *Social Justice Research, 29*(4), 456-474. https://doi.org/10.1007/s11211-016-0270-1

Blount, S. (2000). Whoever said that markets were fair? *Negotiation Journal, 16*(3), 237-252. https://doi.org/10.1023/A:1007504113161

Brandt, M. J. (2013). Do the disadvantaged legitimize the social system? A large-scale test of the status–legitimacy hypothe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4*(5), 765-785. https://doi.org/10.1037/a0031751

Caricati, L. (2008).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scale for measuring the economic system justification (ESJ). *Bollettino di Psicologia Applicata, 254*, 53-58.

Caricati, L. (2019). Evidence of decreased system justification among extreme conservatives in non-American samples.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59*(6), 725-745. https://doi.org/10.1080/00224545.2019.1567455

Cer, D., Diab, M., Agirre, E., Lopez-Gazpio, I., & Specia, L. (2017). SemEval-2017 Task 1: Semantic textual similarity-Multilingual and cross-lingual focused evaluation. *arXiv*.

https://doi.org/10.18653/v1/S17-2001

Chen, F. F. (2007). Sensitivity of goodness of fit indexes to lack of measurement invarianc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14*(3), 464-504. https://doi.org/10.1080/10705510701301834

Cheung, G. W., & Rensvold, R. B. (2002). Evaluating goodness-of-fit indexes for testing measurement invarianc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9*(2), 233-255. https://doi.org/10.1207/S15328007SEM0902_5

Chung, J. B., & Kim, T. (2025). Leveraging large language models for enhanced back-translation: Techniques and applications. *IEEE Access, 13*, 61322-61328. https://doi.org/10.1109/ACCESS.2025.3557014

Cornelis, I., Van Hiel, A., Roets, A., & Kossowska, M. (2009). Age differences in conservatism: Evidence on the mediating effects of personality and cognitive style. *Journal of Personality, 77*(1), 51-88. https://doi.org/10.1111/j.1467-6494.2008.00538.x

Crockett, D., & Pendarvis, N. (2017). A research agenda on political ideology in consumer research: A commentary on Jung et al.'s "blue and red voice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44*(3), 500-502. https://doi.org/10.1093/jcr/ucx083

Dao, H. M., Theotokis, A., & Brakus, J. J. (2025). Freedom or control? Liberals' versus conservatives' responses to frontline employee behavioral control policies. *Journal of the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54.* https://doi.org/10.1007/s11747-025-01119-z

Davidson, A. (2025). Countering search ad avoidance: How political orientation affects trust in search advertising. *Journal of Advertising, 54*(3), 377-393. https://doi.org/10.1080/00913367.2024.2393708

Dirilen-Gumus, O. (2011). Differences in system justification with respect to gender, political conservatism, socio-economic status and religious fundamentalism. *Procedia - 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30*, 2607-2611. https://doi.org/10.1016/j.sbspro.2011.10.510

Elek, D., Cigler, H., Gruning, D. J., & Ježek, S. (2025). Advancing the psychometrics of reverse-keyed items: Enriching cognitive theory by a logical and linguistic perspective. *Frontiers in Psychology, 16,* Article 1684612. https://doi.org/10.3389/fpsyg.2025.1684612

Feldman, S., & Johnston, C. (2014). Understanding the determinants of political ideology: Implications of structural complexity. *Political Psychology, 35*(3), 337-358. https://doi.org/10.1111/pops.12055

Feygina, I., Jost, J. T., & Goldsmith, R. E. (2009). System justification, the denial of global warming, and the possibility of "system-sanctioned chang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6*(3), 326-338. https://doi.org/10.1177/0146167209351435

Friesen, J. P., Laurin, K., Shepherd, S., Gaucher, D., & Kay, A. C. (2019). System justification: Experimental evidence, its contextual nature, and implications for social change.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58*(2), 315-339. https://doi.org/10.1111/bjso.12278

Goldsmith, R. E., Feygina, I., & Jost, J. T. (2013). The gender gap in environmental attitudes: A system justification perspective. In M. Alston & K. Whittenbury (Eds.), *Research, Action and Policy: Addressing the Gendered Impacts of Climate Change* (pp. 159-171). Springer Netherlands. https://doi.org/10.1007/978-94-007-5518-5_12

Google. (2025). *Gemini 3* [Large language model]. https://gemini.google.com/app

Goudarzi, S., Pliskin, R., Jost, J. T., & Knowles, E. D. (2020). Economic system justification predicts

muted emotional responses to inequality. *Nature Communications, 11*(1), Article 383. https://doi.org/10.1038/s41467-019-14193-z

Hafenbradl, S., & Waeger, D. (2016). Ideology and the micro-foundations of CSR: Why executives believe in the business case for CSR and how this affects their CSR engagement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60*(4), 1582-1606. https://doi.org/10.5465/amj.2014.0691

Hair, J. F., Black, W. C., Babin, B. J., & Anderson, R. E. (2013). *Multivariate Data Analysis*. Pearson Education.

Henseler, J., Ringle, C. M., & Sarstedt, M. (2015). A new criterion for assessing discriminant validity in variance-bas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Journal of the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43*, 115-135. https://doi.org/10.1007/s11747-014-0403-8

Ho, A. K., Sidanius, J., Kteily, N., Sheehy-Skeffington, J., Pratto, F., Henkel, K. E., Foels, R., & Stewart, A. L. (2015). The nature of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Theorizing and measuring preferences for intergroup inequality using the new SDO_7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9*(6), 1003-1028. https://doi.org/10.1037/pspi0000033

Hoffarth, M. R., Azevedo, F., & Jost, J. T. (2019). Political conservatism and the exploitation of nonhuman animals: An application of system justification theory. *Group Processes & Intergroup Relations, 22*(6), 858-878. https://doi.org/10.1177/1368430219843183

Hu, L. t.,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6*(1), 1-55. https://doi.org/10.1080/10705519909540118

Jain, S. S., Jain, S. P., & Li, Y. J. (2023). Sustaining livelihoods or saving lives? Economic system justification in the time of COVID-19. *Journal of Business Ethics, 183*, 71-104. https://doi.org/10.1007/s10551-022-05091-4

Jasinenko, A., Christandl, F., & Meynhardt, T. (2020). Justified by ideology: Why conservatives care less about corporate social irresponsibility.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114*, 290-303. https://doi.org/10.1016/j.jbusres.2020.04.006

Jiao, W., Wang, W., Huang, J.-t., Wang, X., Shi, S., & Tu, Z. (2023). Is ChatGPT a good translator? Yes with GPT-4 as the engine. *arXiv.* https://doi.org/10.48550/arXiv.2301.08745

Joo, J., Park, M., Yim, S., & Song, J. H. (2025). Validation of psychological entitlement measurement in South Korea. *Asi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8*(3), Article e70042. https://doi.org/10.1111/ajsp.70042

Jorgensen, T. D., Pornprasertmanit, S., Schoemann, A. M., & Rosseel, Y. (2025). *semTools: Useful tools for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R package version 0.5-7]. https://CRAN.R-project.org/package=semTools

Jost, J., & Hunyady, O. (2003). The psychology of system justification and the palliative function of ideology. *European Review of Social Psychology, 13*(1), 111-153. https://doi.org/10.1080/10463280240000046

Jost, J. T. (2020). *A theory of system justification*. Harvard University Press.

Jost, J. T., Badaan, V., Goudarzi, S., Hoffarth, M., & Mogami, M. (2019). The future of system justification theory.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58*(2), 382-392. https://doi.org/10.1111/bjso.12309

Jost, J. T., & Banaji, M. R. (1994). The role of stereotyping in system-justification and the production of false consciousness.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3*(1), 1-27.

https://doi.org/10.1111/j.2044-8309.1994.tb01008.x

Jost, J. T., Banaji, M. R., & Nosek, B. A. (2004). A decade of system justification theory: Accumulated evidence of conscious and unconscious bolstering of the status quo. *Political Psychology, 25*(6), 881-919. https://doi.org/10.1111/j.1467-9221.2004.00402.x

Jost, J. T., Becker, J., Osborne, D., & Badaan, V. (2017). Missing in (collective) action: Ideology, system justification, and the motivational antecedents of two types of protest behavior.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26*(2), 99-108. https://doi.org/10.1177/0963721417690633

Jost, J. T., Bertin, J. A., Javeed, A., Liaquat, U., & Rivera Pichardo, E. J. (2023). Rejoinder to Rubin, Owuamalam, Spears, and Caricati (2023): Ideology is not accuracy; identity is not everything; and the social identity model of social attitudes does not explain system justification, it presupposes it. *European Review of Social Psychology, 34*(2), 244-267. https://doi.org/10.1080/10463283.2022.2122319

Jost, J. T., Blount, S., Pfeffer, J., & Hunyady, G. (2003). Fair market ideology: Its cognitive-motivational underpinnings. *Research in Organizational Behavior, 25,* 53-91. https://doi.org/10.1016/S0191-3085(03)25002-4

Jost, J. T., Chaikalis-Petritsis, V., Abrams, D., Sidanius, J., van der Toorn, J., & Bratt, C. (2012). Why men (and women) do and don't rebel: Effects of system justification on willingness to protest.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8*(2), 197-208. https://doi.org/10.1177/0146167211422544

Jost, J. T., & Hunyady, O. (2005).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system-justifying ideologies.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4*(5), 260-265. https://doi.org/10.1111/j.0963-7214.2005.00377.x

Jost, J. T., & Kay, A. C. (2005). Exposure to benevolent sexism and complementary gender stereotypes: Consequences for specific and diffuse forms of system justific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8*(3), 498-509. https://doi.org/10.1037/0022-3514.88.3.498

Jost, J. T., Liviatan, I., Toorn, J. V. D., Ledgerwood, A., Mandisodza, A., & Nosek, B. A. (2010). System justification: How do we know it's motivated? In R. Bobocel, A. C. Kay, M. P. Zanna, & J. M. Olson (Eds.), *The Psychology of Justice and Legitimacy* (1st ed., pp. 173-204). Psychology Press.

Jost, J. T., Pelham, B. W., Sheldon, O., & Ni Sullivan, B. (2003). Social inequality and the reduction of ideological dissonance on behalf of the system: evidence of enhanced system justification among the disadvantaged.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3*(1), 13-36. https://doi.org/10.1002/ejsp.127

Jost, J. T., & Thompson, E. P. (2000). Group-based dominance and opposition to equality as independent predictors of self-esteem, ethnocentrism, and social policy attitudes among African Americans and European American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6*(3), 209-232. https://doi.org/10.1006/jesp.1999.1403

Kam, C. C. S. (2018). Why do we still have an impoverished understanding of the item wording effect? An empirical examination.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47*(3), 574-597. https://doi.org/10.1177/0049124115626177

Kay, A. C., Gaucher, D., Peach, J. M., Laurin, K., Friesen, J., Zanna, M. P., & Spencer, S. J. (2009). Inequality, discrimination, and the power of the status quo: Direct evidence for a motivation to see the way things are as the way they should b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7(3), 421-434. https://doi.org/10.1037/a0015997

Kay, A. C., & Jost, J. T. (2003). Complementary justice: Effects of "poor but happy" and "poor but honest" stereotype exemplars on system justification and implicit activation of the justice motiv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5*(5), 823-837. https://doi.org/10.1037/0022-3514.85.5.823

Kay, A. C., Jost, J. T., Mandisodza, A. N., Sherman, S. J., Petrocelli, J. V., & Johnson, A. L. (2007). Panglossian ideology in the service of system justification: How complementary stereotypes help us to rationalize inequality. In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39, pp. 305-358). Academic Press. https://doi.org/10.1016/S0065-2601(06)39006-5

Kenny, D. A., Kaniskan, B., & McCoach, D. B. (2015). The performance of RMSEA in models with small degrees of freedom.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44*(3), 486-507. https://doi.org/10.1177/0049124114543236

Lenk, J. D., Chandon, P., & Doshi, S. (2025). Which consumers change their food choices in response to carbon footprint labels? The role of political ideology and other socio-demographic factors. *Nutrients, 17*(8), 13-21. https://doi.org/10.3390/nu17081321

Li, W., Yang, Y., Wu, J., & Kou, Y. (2020). Testing the status-legitimacy hypothesis in china: Objective and subjective socioeconomic status divergently predict system justifica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46*(7), 1044-1058. https://doi.org/10.1177/0146167219893997

Lihua, Z. (2022). The relationship between machine translation and human translation under the influence of artificial intelligence machine translation. *Mobile Information Systems, 2022*, Article 9121636. https://doi.org/10.1155/2022/9121636

Lu, S.-C., Xu, C., Kaur, M., Edelen, M. O., Pusic, A., & Gibbons, C. (2025). Can machine translation match human expertise? Quantifying the performance of large language models in the translation of patient-reported outcome measures (PROMs). *Journal of Patient-Reported Outcomes, 9*(1), Article 94. https://doi.org/10.1186/s41687-025-00926-w

Manganelli Rattazzi, A. M., Bobbio, A., & Canova, L. (2007). A short version of the Right-Wing Authoritarianism (RWA) Scal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3*(5), 1223-1234. https://doi.org/10.1016/j.paid.2007.03.013

McCoy, S. K., & Major, B. (2007). Priming meritocracy and the psychological justification of inequality.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3*(3), 341-351. https://doi.org/10.1016/j.jesp.2006.04.009

McDonald, R. P., & Ho, M. H. (2002). Principles and practice in reporting structural equation analyses. *Psychological Methods, 7*(1), 64-82. https://doi.org/10.1037/1082-989x.7.1.64

Napier, J. L., Bettinsoli, M. L., & Suppes, A. (2020). The palliative function of system-justifying ideologies. *Current Opinion in Behavioral Sciences, 34*, 129-134. https://doi.org/10.1016/j.cobeha.2020.03.002

Napier, J. L., Mandisodza, A. N., Andersen, S. M., & Jost, J. T. (2006). System justification in responding to the poor and displaced in the aftermath of Hurricane Katrina. *Analyses of Social Issues and Public Policy, 6*(1), 57-73. https://doi.org/10.1111/j.1530-2415.2006.00102.x

Owuamalam, C. K., Rubin, M., & Spears, R. (2019). Revisiting 25-years of system motivation explanation for system justific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 identity model of system attitudes.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58(2), 362-381.
https://doi.org/10.1111/bjso.12285

R Core Team. (2025). *R: A language and environment for statistical computing* [Version 4.5.1]. R Foundation for Statistical Computing.
https://www.R-project.org/

Reimers, N., & Gurevych, I. (2019). Sentence-BERT: Sentence embeddings using Siamese BERT-Networks. *arXiv.*
https://doi.org/10.48550/arXiv.1908.10084

Revelle, W. (2025). *psych: Procedures for psychological, psychometric, and personality research* [R package version 2.5.6].
https://CRAN.R-project.org/package=psych

Rodriguez-Bailon, R., Bratanova, B., Willis, G. B., Lopez-Rodriguez, L., Sturrock, A., & Loughnan, S. (2017). Social class and ideologies of inequality: How they uphold unequal societies. *Journal of Social Issues, 73*(1), 99-116.
https://doi.org/10.1111/josi.12206

Roemer, E., Schuberth, F., & Henseler, J. (2021). HTMT2—an improved criterion for assessing discriminant validity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dustrial Management & Data Systems, 121*(12), 2637-2650.
https://doi.org/10.1108/imds-02-2021-0082

Rosseel, Y. (2012). lavaan: An R package for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Journal of Statistical Software, 48*(2), 1-36.
https://doi.org/10.18637/jss.v048.i02

Rubin, M., Kevin Owuamalam, C., Spears, R., & Caricati, L. (2023). A social identity model of system attitudes (SIMSA): Multiple explanations of system justification by the disadvantaged that do not depend on a separate system justification motive. *European Review of Social Psychology, 34*(2), 203-243.
https://doi.org/10.1080/10463283.2022.2046422

Rutto, F., Russo, S., & Mosso, C. (2014).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Democratic System Justification Scale. *Social Indicators Research, 118*(2), 645-655.
https://doi.org/10.1007/s11205-013-0444-2

Silva, W. A. D., Do Bu, E. A., & Pereira, C. R. (2025). System Justification Scale: Gender invariance analysis. *Current Psychology, 44*(15), 13653-13660.
https://doi.org/10.1007/s12144-025-08139-6

Silva, W. A. D., & Pereira, C. R. (2023). Do people see the way things are as they should be? Measuring the individual differences in system justification. *Current Psychology, 42*(21), 17805-17824.
https://doi.org/10.1007/s12144-022-02992-5

Valdes, E. A., Liu, J. H., & Williams, M. (2023). Testing the status-legitimacy hypothesis: Predicting system justification using objective and subjective socioeconomic status i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Asi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6(2), 238-253.
https://doi.org/10.1111/ajsp.12555

Valtonen, J., Azevedo, F., & Jost, J. T. (2026). Economic system justification predicts stigmatization of mental illness in the United States. *American Psychologist.*
https://doi.org/10.1037/amp0001688

Vargas-Salfate, S., Paez, D., Liu, J. H., Pratto, F., & Gil de Zúñiga, H. (2018). A comparison of social dominance theory and system justification: The role of social status in 19 nation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44*(7), 1060–1076.
https://doi.org/10.1177/0146167218757455

Wickham, H., Averick, M., Bryan, J., Chang, W., McGowan, L. D. A., Francois, R., Grolemund, G., Hayes, A., Henry, L., Hester, J., Kuhn, M., Pedersen, T. L., Miller, E., Bache, S. M., Muller, K., Ooms, J., Robinson, D., Seidel, D.

P., Spinu, V.,⋯Yutani, H. (2019). Welcome to the Tidyverse. *Journal of Open Source Software, 4*(43), Article 1686.
https://doi.org/10.21105/joss.01686

Wong, N., Rindfleisch, A., & Burroughs, J. E. (2003). Do reverse-worded items confound measures in cross-cultural consumer research? The case of the material values scale.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30*(1), 72-91.
https://doi.org/10.1086/374697

Yeung, A. W. Y., Kay, A. C., & Peach, J. M. (2013). Anti-feminist backlash: The role of system justification in the rejection of feminism. *Group Processes & Intergroup Relations, 17*(4), 474-484.
https://doi.org/10.1177/1368430213514121

Zitelmann, R. (2023). Attitudes towards capitalism in 34 countries on five continents. *Economic Affairs, 43*(3), 353-371.
https://doi.org/10.1111/ecaf.12591

1 차원고접수 : 2026. 02. 20.
수정원고접수 : 2026. 04. 17.
최종게재결정 : 2026. 04. 17.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2026, Vol. 40, No. 2, 179-217
https://doi.org/10.21193/kjspp.2026.40.2.004

Regular Article

Validating the Market and Economic System Justification Scales Among Koreans

Changi Song **Chanki Moon**

Department of Psychology, Jeonbuk National University

System justification is a crucial social psychological construct for explaining why individuals sometimes support unjust social systems. This study validated two scales measuring justification for the procedural aspects (market system justification) and outcome-related aspects (economic system justification) of the economic system within the South Korean context, by adapting measures from Western culture. In Study 1 (n = 788) and Study 2 (n = 734), the factor structures of each scale were identified through exploratory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es. Study 3 (n = 400) analyzed the validity of the scales by examining their associations with each other and with theoretically relevant constructs, including right-wing authoritarianism,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and conservatism. In this process, factors consisting of reverse-coded items demonstrated low validity and were therefore excluded from the scales. Measurement invariance across gender, age, and subjective socioeconomic status was subsequently confirmed for the final selected factors. Consequently, this study proposes a two-factor Market System Justification Scale and a single-factor Economic System Justification Scale. By providing two measurement tools for assessing the justification of economic systems, this study lays the foundation for further empirical research into the economic values and system justification mechanisms of Koreans.

Key words : system justification, market system justification, economic system justification, scale validation

부록 Ⅰ. 시장 체제 정당화 척도 원 문항과 역 번역 문항 간 코사인 유사도

번호	원척도 문항	역번역 문항	유사도
1	The free market system is a fair system. [Completely disagree/Completely agree]	The market economy is a fair system.	.926
2	Common or “normal” business practices must be fair, or they would not survive.	Standard business practices are bound to be fair. Otherwise, companies wouldn’t survive.	.822
3	In many markets, there is no such thing as a true “fair” market price	In many cases, a truly “fair” market price doesn’t exist.	.938
4	Ethical businesses are not as profitable as unethical businesses	Ethical businesses are not as profitable as unethical ones.	.975
5	The most fair economic system is a market system in which everyone is allowed to independently pursue their own economic interests	A market system where everyone can independently pursue their own interests is the fairest economic system.	.927
6	Acting in response to market forces is not always a fair way to conduct business	Conducting business in response to market pressures isn’t always fair.	.919
7	The free market system is an efficient system	The market economic system is efficient.	.854
8	The free market system has nothing to do with fairness	The market system is far from fair.	.728
9	Acting in response to market forces is an ethical way to conduct business	Conducting business in response to market pressures is ethical.	.895
10	In free market systems, people tend to get the outcomes that they deserve	Under a market economic system, people tend to get the share they deserve.	.867
11	The fairest outcomes result from transactions in which the buyers pay the “fair” market price	The fairest outcome occurs in transactions where the buyer pays a fair market price.	.912
12	Profitable businesses tend to be more morally responsible than unprofitable businesses	Highly profitable companies tend to have a greater sense of moral responsibility than those that aren’t.	.872
13	Regulated trade is fair trade	Transactions that follow regulations are fair transactions.	.776
14	Economic markets do not fairly reward people	The economic market does not compensate people fairly.	.889
15	Whatever price a buyer and seller agree to trade at is a fair price	Whatever the amount, a price agreed upon by both the seller and the buyer is a fair price.	.839
16	When a company raises the prices that it charges its customers for its goods, because management has obtained market research which suggests that its customers are willing to pay more, it is… [Unfair/Fair]	If a company tries to raise prices based on market research showing that consumers are willing to pay more, this is…	.924

부록 Ⅰ. 시장 체제 정당화 척도 원 문항과 역 번역 문항 간 코사인 유사도 (계속)

번호	원척도 문항	역번역 문항	유사도
17	When a professional athlete receives a raise because a raise has been received by another league player of comparable ability, but none the other team members receive comparable raises, it is…	If Athlete A's salary is raised to match comparable players on other teams, while their teammates' salaries remain the same, this is…	.733
18	The fact that scarce goods tend to cost more in a free market system is…	Under a free market system, the fact that scarce products are more expensive is…	.911
19	When a company downsizes in order to reduce its costs to be more competitive with rival companies, it is…	If a company plans layoffs to cut costs and stay competitive, this is…	.763
20	When concessions at airports and concerts charge higher prices for beverages because they know that their customers have no alternatives, it is…	Charging higher prices for drinks at airports or concert venues, knowing consumers have nowhere else to buy them, is…	.882
21	The fact that wealthier people live in bigger homes and better neighborhoods than poorer people who cannot afford to pay the same prices is…	For the wealthy to live in bigger houses in better neighborhoods than the poor, who cannot afford to pay the same amount, is…	.805
22	When a company lays off higher-cost employees in the U.S. and replaces them with lower wage workers in a foreign country in order to make higher profits, it is…	If a company replaces high-wage domestic workers with low-wage foreign workers to increase profits, this is…	.832
23	The fact that housing prices in Palo Alto, California are four to six times those for comparable houses in Chicago is…	The fact that comparable houses are more expensive in Seoul or Gyeonggi-do than in provincial areas is…[a]	.661
24	The fact that more educated employees tend to earn higher wages than less-educated employees is…	For workers with higher education levels to receive higher wages than those with lower education levels is…	.766
25	The fact that some working families can afford to hire more household help than others is…	The fact that some newlyweds can afford to live in larger homes than others is…[a]	.644

[a] 한국 맥락에 맞게 주요 단어를 대체한 문항

부록 Ⅱ. 경제적 체제 정당화 척도 원 문항과 역 번역 문항 간 코사인 유사도

번호	원척도 문항	역번역 문항	유사도
1	If people work hard, they almost always get what they want.	People can get what they want if they work hard.	.894
2	The existence of widespread economic differences does not mean that they are inevitable.	While economic differences are widespread, those differences are not inevitable.	.864
3	Laws of nature are responsible for differences in wealth in society.	The differences in wealth in society are due to the laws of nature.	.953
4	It is virtually impossible to eliminate poverty.	Eliminating poverty is nearly impossible.	.912
5	There are many reasons to think that the economic system is unfair.	There are many reasons to think that our economic system is unfair.	.963
6	Poor people are not essentially different from rich people.	Poor people are not essentially different from rich people.	.976
7	Most people who don't get ahead in our society should not blame the system; they have only themselves to blame.	People shouldn't blame the system for not succeeding in our society; the responsibility lies solely with themselves.	.792
8	Equal distribution of resources is a possibility for our society.	An equal distribution of resources is possible in our society.	.951
9	Social class differences reflect differences in the natural order of things.	Differences in social class follow the natural order.	.869
10	Economic differences in the society reflect an illegitimate distribution of resources.	Economic inequality occurs because of the unjust distribution of resources.	.756
11	There will always be poor people, because there will never be enough jobs for everybody.	Because there aren't enough jobs for everyone, there will always be poor people.	.882
12	Equal distribution of resources is unnatural.	An equal distribution of wealth is not natural.	.735
13	Economic positions are legitimate reflections of people's achievements.	Economic status is a legitimate indicator of a person's achievement.	.680
14	If people wanted to change the economic system to make things equal, they could.	If people really wanted it, the economic system could be changed to be equal.	.877
15	It is unfair to have an economic system that produces extreme wealth and extreme poverty at the same time.	An economic system that produces extreme wealth and extreme poverty at the same time is unfair.	.976
16	There is no point in trying to make incomes more equal.	It is useless to try to make income more equal.	.882
17	There are no inherent differences between rich and poor; it is purely a matter of the circumstances into which you were born.	Rich people and poor people are not innately different; only the environments they were born into are different.	.881